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

목 차



서론	0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01
1.1 연구의 배경	001
1.2 연구의 목적	00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02
2.1 연구 범위	002
2.2 연구 방법	003
3. 선행연구 및 공모사업 추진방식 분석	005
3.1 선행연구 분석	005
3.2 공모사업의 추진방식	014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특성	036
1. 경기도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036
1.1 사업 추진현황	036
1.2 사업 공모절차	043
1.3 사업의 추진체계	043
1.4 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	045
2. 서울특별시 : 도시경관 개선사업	051
2.1 주요내용	051
2.2 특징	052

3. 인천광역시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053
3.1 주요내용	053
3.2 특징	054
4. 시사점 도출	055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실태 및 추진 주체 의식 분석	056
1. 관련 조례 및 예산현황	056
1.1 관련 조례	056
1.2 예산현황	058
2. 사업 추진현황	059
2.1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059
2.2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068
2.3 경관협정 시범사업	075
2.4 디자인 아카데미사업	079
3. 사업 추진체계	080
3.1 사업 추진절차	080
3.2 디자인관리 자문단 운영	085
4. 행정 및 디자인관리 자문단 의식 분석	087
4.1 조사개요	087
4.2 사업 선정방식	090

4.3 사업 추진과정	091
4.4 운영관리	093
5.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096

IV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099
--------------------------------------	-----

1.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와 공모사업 기본방향	099
2. 추진과제	101
2.1 추진방향	101
2.2 개선방향	103

V

결론 및 정책제언	106
-----------	-----

■ 참고 문헌	109
---------	-----

■ 부록	110
------	-----

1. 디자인 전문직 FGI조사	110
2. 시설 건축직/일반 행정직 FGI조사	116
3. 디자인관리 자문단 인터뷰조사 및 자문회의	122

표목차

[표 1-1] 관련 선행연구 분석	007
[표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010
[표 1-3]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선행연구 검토 결과)	012
[표 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015
[표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개요	016
[표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017
[표 1-7]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요	019
[표 1-8] 농촌협약 체결 시·군 선정 및 추진 절차	021
[표 1-9] 농촌협약 체결 시·군 선정 평가항목	022
[표 1-10]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024
[표 1-11]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	025
[표 1-12]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026
[표 1-13]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및 지원	028
[표 1-14]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029
[표 1-15]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031
[표 1-16] 국토교통부 사업	032
[표 1-17]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033
[표 1-18] 중앙부처 중장기 종합분야 공모사업 추진체계(농식품부, 국토부)	034
[표 1-19] 중앙부처 단기 공모사업 추진체계(문체부, 국토부)	035
[표 2-1]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사업 추진 현황	036
[표 2-2] 연도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037
[표 2-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성남시 산성동 복지회관, 2014년)	038
[표 2-4]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구리시 인창초등학교, 2017년)	038
[표 2-5]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2020년)	039
[표 2-6] 연도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	040
[표 2-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수원시 서둔동 200번길 일원, 2019년)	041
[표 2-8] 길 찾기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	042

[표 2-9] 시·군별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044
[표 2-10] 연도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045
[표 2-11] 시범사업 준공 시점	048
[표 2-12] 시범사업 디자인 개발 입찰 결과(2019년 사업 기준)	050
[표 2-13]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사업(2021년 기준)	051
[표 2-14]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2022년도 선정지	052
[표 2-15] 인천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개요	054
[표 3-1] 충남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조례 및 경관 조례 상 공모사업	057
[표 3-2] 충남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연차별 예산 현황	058
[표 3-3] 충남 경관협정 시범사업 내용 및 방향	075
[표 3-4] 충남 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및 협정 체결 행정절차	076
[표 3-5] 충남 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항목	078
[표 3-6] 충남 디자인 아카데미사업(2020년 기준)	079
[표 3-7] 조사대상 및 개요	088
[표 3-8] 조사대상별 조사내용	089
[표 3-9] 행정 대상 FGI 조사결과 주요내용	094
[표 3-10] 디자인관리 자문단 조사결과 주요내용	09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체계도	004
[그림 1-2]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019
[그림 1-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선정 현황	023
[그림 2-1] 시범사업 추진 일정	043
[그림 2-2] 성남시 산성동복지회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046
[그림 2-3] 포천시 포천초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046
[그림 2-4] 구리시 교문1동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046
[그림 2-5] 실제 시범사업 추진 일정	047
[그림 3-1] 충남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예산 현황	058
[그림 3-2]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유형	060
[그림 3-3] 충남 시·군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현황	060
[그림 3-4]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수와 총사업비	060
[그림 3-5] A지자체 사업 추진 결과	061
[그림 3-6] A지자체 사업 추진 후 문제점	062
[그림 3-7] B지자체 사업 추진 전 현황	063
[그림 3-8] B지자체 사업 추진 결과	065
[그림 3-9] C지자체 사업 추진 전 현황	066
[그림 3-10] C지자체 사업 추진 결과	067
[그림 3-11] 충남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수와 총사업비	068
[그림 3-12] 충남 시·군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현황	069
[그림 3-13] D지자체 사업 추진 전과 후 현황	070
[그림 3-14] D지자체 사업 추진 후 문제점	071
[그림 3-15] E지자체 사업 대상지	072
[그림 3-16] E지자체 사업 결과	073
[그림 3-17] E지자체 사업 추진 후 문제점	074

[그림 3-18] 충남 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과정·····	077
[그림 3-19] 공모사업 추진 일정(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	081
[그림 3-20] 실제 공모사업 추진 일정(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	082
[그림 3-21] 공모사업 추진 일정(경관협정 시범사업) ·····	084
[그림 3-22] 충남 디자인관리 자문단 역할 및 구성 ·····	085
[그림 3-23] 충남 디자인관리 자문단 지원 단계 및 내용·····	086
[그림 3-24] 행정 대상 FGI조사 ·····	088
[그림 3-25]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절차 ·····	088
[그림 3-26] 시·군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현황 ·····	097
[그림 4-1] 통합디자인의 개념 ·····	099
[그림 4-2]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기본방향 ·····	100
[그림 4-3]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개선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	101
[그림 4-4]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체계 개선방향 ·····	104
[그림 4-5] 충남 디자인관리 자문단 구성 ·····	105
[그림 4-6] 충남 사업유형별 디자인관리 자문단 역할 ·····	105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충남에서는 충남의 정체성 정립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관, 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디자인 아카데미사업, 그리고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관협정시범사업의 총 4개의 사업이다.

특히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전국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2009년 당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도 차원의 “공공디자인팀(2021년 현재 경관디자인팀으로 부서 명칭 변경)” 조직을 구성하고 공공디자인을 충남에 확산시키고자 추진했던 사업이다.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공무원, 디자인 관련 실무자, 주민, 학생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의 S/W사업으로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 사업 위주로 추진했던 방식과는 차별성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역시 생활환경에서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공공디자인과 접목하여 도민의 생활안전망 확보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경관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충남의 경관보존과 개선을 위해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지역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이와 같이 충남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있어서 당시 트렌드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낙후된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지금 사업의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사업 효과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자가 공모사업 추진 시 컨설팅¹⁾ 또는 충청남도 경관디자인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완료 후 점검에 참여하여 사업내용 및 사후관리 등을 살펴본 경험으로 봤을 때, 사업 담당자 및 주민의 디자인 마인드 부족, 관심도 결여 및 관리주체 불명확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내용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매년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사업기간 및 사업비 측면에서 단발성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의 관심 및 역량향상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충남에서 추진하는 건축, 조경, 디자인 분야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자문하는 디자인 자문 제도

이에, 최근 중앙부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서 및 부처 간 연계 사업을 통한 장소의 통합디자인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와 성과 향상, 사업 간 시너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남에서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경관 및 환경개선,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충남에서 10년 이상 추진해왔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 사업들이 각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 공간을 종합적 및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관리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15개 시·군
- 내용적 범위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선행연구 분석
 -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체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타 광역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특성 분석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실태 및 특성 분석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관련 주체 의식분석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개선방안 제시

2.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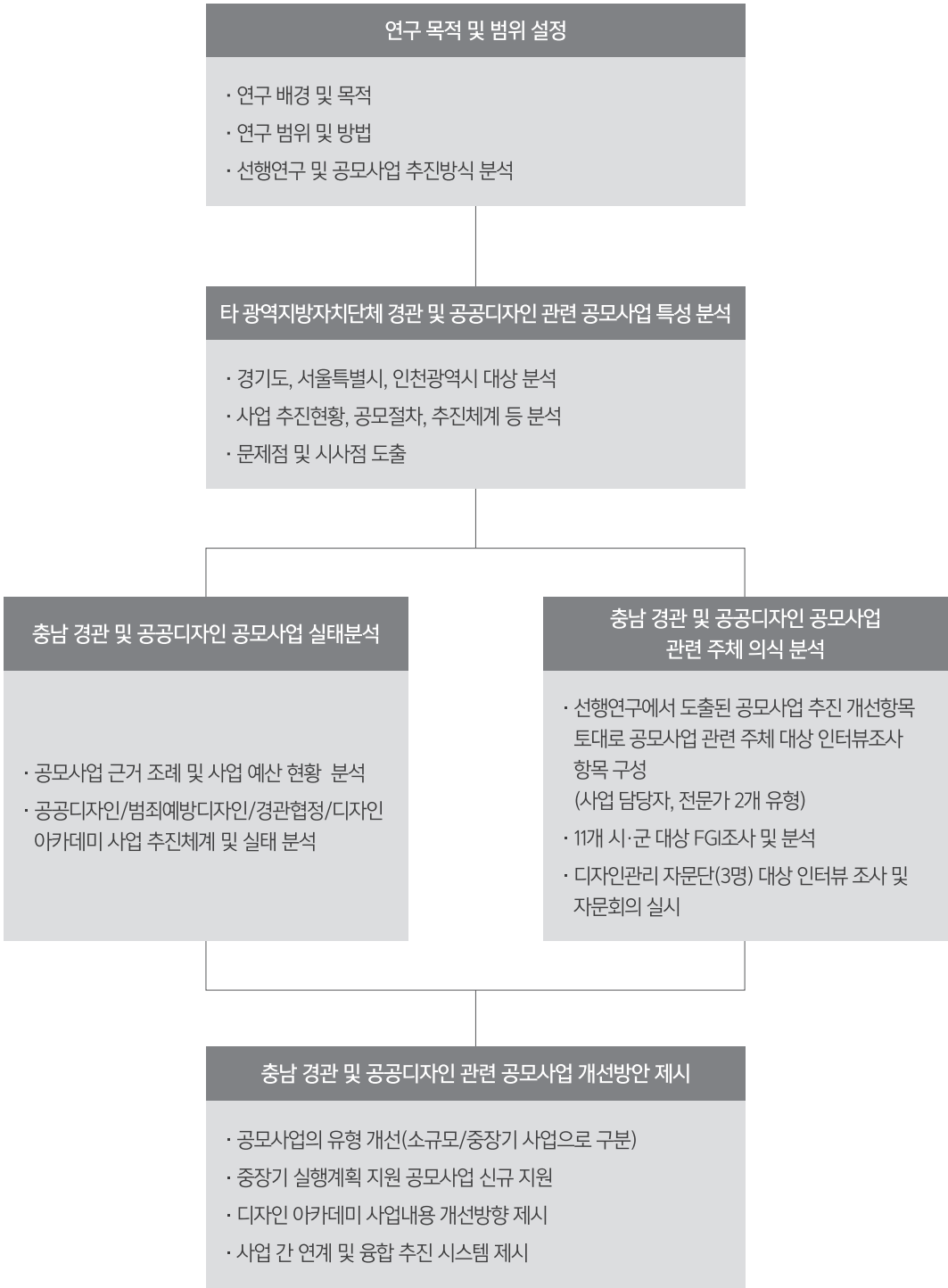
-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분석을 위해 기사 및 인터넷 자료 수집·분석
-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경관협정 시범사업 실태 및 현황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분석(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내부자료, 6개 시·군 사업계획서)
- 공모사업 추진 근거 분석을 위해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분석

2) 현장조사 및 인터뷰조사

-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사업 담당자 대상 인터뷰조사
 - 사업 추진방식 및 문제점, 향후 추진방향 등
-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사례 현장조사
-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담당자 대상 FGI
 -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 담당자(공주, 천안, 홍성, 아산, 논산, 서산, 보령, 예산, 계룡, 금산, 태안)
 -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차례 조사 실시

3)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충남에서 디자인관리 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인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및 자문회의 실시
 - 비대면 화상회의와 서면으로 진행



[그림 1-1] 연구체계도

3. 선행연구 및 공모사업 추진방식 분석

3.1 선행연구 분석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최근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들은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기준을 설정하고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들 중 대상지를 선정하면 선정된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국비와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즉, 충남에서 추진하는 공모방식과 비슷하다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들의 공모방식과 추진과정 등을 분석하는 것은 충남의 공모사업개선편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례중심 연구보다 사업의 공모방식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사후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 연구를 선별, 검토하여 공모사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공모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연구

염철호 외(2013)는 건축, 도시 관련 공모사업은 중장기적 사업전략, 행정조직의 역량, 협업주체의 참여역량에 초점에 맞춰 선정해주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되 사업평가를 통해 추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김덕준 외(2019)의 연구에서는 전 분야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선정 기준 개선과 공모기간 및 예산매칭비율, 대상지 선정기준 등 사업선정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표준 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염철호 외(2013)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역량에 초점을 맞춘 사업 선정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역량에 따른 사업 선정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된다며 지역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2) 사업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이영아(2021)는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사례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민 역량강화 과정의 필요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관부처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문과 평가를 통해 사업기

간 및 규모 변경이 가능하도록 유연화, 주관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추진단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조진호 외(2018)는 주민참여가 작동되고 있지 않는 문제, 사업내용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 및 CPTED 등과의 융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유아람 외(2018)는 이영아(2021)와 달리 중앙부처와의 수평적 조직체계 확립을 통해 지자체 독자적 사업 시행 및 운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입체적이고 연계 가능한 공간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3) 사업 추진과정 및 사후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김홍주 외(2016)는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지속적이고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며 융복합 사업 발굴 계획, 협의체 및 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의 실행, 지자체의 운영재원 확보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관련 규정 마련 등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장명(2015)은 충북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시·군 창의사업 계획서 분석을 통해 H/W와 S/W사업의 병행 및 연계, 주민 역량강화 S/W프로그램 추진 및 지속성, 주민_행정_전문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최영완 외(2016)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실태분석을 통해 주민 역량강화 및 지속적 지원 필요,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시설물 운영,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민간전문가 등 협의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 [표 1-1]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구분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 결과
사업 추진 방식	엄철호 외 (2013)	건축·도시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들 간 차별성 확보 및 지역 역량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 개선방안 제시	- 지역역량에 초점을 맞춘 사업선정 및 추진체계의 개편 필요 - 원칙적으로 지역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서 소프트 사업에 집중하고 각 부처의 정책실현을 위해 거점사업 일부에 시설사업지 지원 연계 방식으로 개편 필요 - 위 2가지 실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갖춘 지자체에 역량강화 선도 지역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타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한편, 행정역량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관리 체계의 강화가 필요
	김덕준 외 (2019)	중앙부처 공모사업별 장단점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제시	- 공모사업 선정 시 성과기준,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 등 사업 운영 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선정기준 개선 필요 - 지역 역량에 따른 사업 선정으로 지역간 불균형 발생, 사업 중복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짧은 공모사업 기간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세부사업내용/투입계획/운영계획/성과관리 계획 등의 표준 사업 선정기준을 제시
	이영아 (2021)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사례로 공동체 역량 강화가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주민 역량강화 과정은 공모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의 틀에서 이루어지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음 -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과 피드백, 사업 중간에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및 규모 변경 필요 - 중앙부처와 지자체, 추진단이 사업 방향에 대해 수시로 의사소통을 통한 방향 확인 필요
사업 추진 과정	조진호 외 (2018)	도시재생 사업구역 주민의 장소 애착에 따른 사업 및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인식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방향성 제시	-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고 자가를 점유한 주민일수록 장소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장소 애착이 높을수록 공공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으나,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참여기회 확보, 설명회, 의견반영의 주민참여 요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인정, 마을회관, 휴게시설, CCTV, 가로등 등 지역 커뮤니티 및 CPTED 설계와의 융합 필요 - 사업 추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제적 측면보다 비자발적 이주, 커뮤니티 와해, 공동체 갈등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
	유아람 외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48개 지역 사례의 조직, 공간계획, 프로그램 관점에서 계획을 분석하여 개선방향 제시	- 조직 측면에서는 사업 계획, 진행, 집행에 있어서 상위 행정 조직에 종속된 구조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매년 사업평가를 지양하고 각 지역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독자적 집행을 통한 장기적 시행 및 운영, 독립적인 수평적 조직 유도 필요 - 계획 측면에서는 단위 시설과 가로 중심 사업의 일방적인 합의로 진행되면서 통합되지 못한 평면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어, 단위 사업의 집적 및 중첩, 가로에서 시작되는 3차원적 접근으로 전환 필요 -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고려하였으나 통합적이지 않은 별개의 단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진행에 따라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의 유연한 통합이 필요

구분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 결과
사업 추진 과정 및 사후 관리	김홍주 외 (2016)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업의 계획단계, 실행단계, 완료 운영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계획단계에서는 ①지역역량강화(1년)+본 사업(3년)+지역역량강화(1년)와 같은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지원방안, ②연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계획 수립, ③대상지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법, ④정해져 있는 단기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융복합적인 새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필요 - 실행단계에서는 ①협약체의 작동 및 사업추진 후 갈등 발생 예방을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 활용 필요, ②지역 내 활동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역역량강화사업 발굴 필요 - 운영단계에서는 ①지자체의 운영재원 확보계획의 적절성, ②사업준공 후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사전 마련, ③사업 전후, 이후 유사 사업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이력관리 필요
	우장명 (2015)	충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및 시·군 창의사업 예비계획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성격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제시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도시기반정비의 H/W성격 사업으로서, S/W사업의 연계성 부족 및 주민 역량강화 S/W프로그램 미흡, 중심지와 배후마을 발전 프로그램 미흡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 -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 노력과 주민_행정_전문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상시 협의체계 구축)
	최영완 외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실태와 시설물 운영관리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제시	- 지역 스스로 추가적인 자원확보 어려움 및 주민 역량만으로는 연계사업 지속적 발굴 한계 등의 외부적인 요인, 주민의 역량부족 및 인적투입 제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 및 시설물 운영, 운영관리 기금 부족, 시설물의 기능과 역할의 한계 등이 문제 - 시설에 대한 사업비 과다 책정 및 입지선정의 문제가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관리 방안 마련 시급 - 운영조직 체계 정비 및 인력의 지속적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지역내외 기관 및 단체, 사회적 기업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프로그램 체계 마련 필요

4) 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김덕준 외(2019)의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정리해놓고 있다.

우선 농촌의 중심지를 거점화하여 배후마을 주민들의 거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완료 후 시설의 활용 확대를 위한 주민 조직화, 배후마을까지 통합적 개발 및 접근성 강화, 단계별 및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비의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방식 및 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마을의 여건에 따라 종합, 문화복지, 경제, 경관 등 유형별로 추진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 칸막이로 인해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세부유형 구분을 없애고, 최대 10년의 사업기간을 마을의 역량 및 사업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S/W사업 중심의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쟁, 공모방식 사업 선정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과도한 용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지원이 필요하며 공모경쟁을 완화하는 대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내용 변경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평가를 강화하고, 참여주체의 역량을 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 전환, 주민이 학습하고 활동경험을 축적하여 협의체가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 제공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측정지표를 토대로 한 평가와 시·군에서 관심이 높은 시·군 종합평가 등에 사업 관련 지표를 추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갈등이 사업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민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표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사업 유형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활용도 저하 주민주조직화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배후마을에 연계시설 건립 지원방안 부재 배후마을 통합적 개발 및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동일한 사업비 단계별 또는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유형(종합, 문화복지, 경제, 경관, 신규마을) 칸막이로 인해 창조적 계획 수립 어려움 사업의 세부유형 구분 제거
		사업 완료까지 너무 긴 사업기간 소요 마을 역량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군 역량 강화	경쟁, 공모 방식으로 소외지역 발생 및 과도한 용 역비 지출 -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 고려 - 공모경쟁 완화하는 한편 성과평가는 강화 - 사업비 일부라도 공모가 아닌 곳 지원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시설물 입지 변경 발생 현장점검과 현장평가 강화
		계획 수립 과정의 복잡한 절차와 시간 부족 - 계획서 중심에서 참여주체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 - 주민이 학습, 활동경험을 축적하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 제공
	사업관리	- 시설물 위주의 사후관리 체계 - 성과측정지표를 활용한 평가 실시
		-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의 사업 모니터링 - 시·군 종합평가 등에 사업 관련 지표 추가
		주민갈등과 사후관리 주민갈등관리 방안 필요

* 자료 : 김덕준 외(2019), 정부 공모과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에서 부분 발췌하여 정리

5) 소결

선행연구 분석 결과 사업 선정방식에서는 대상지 선정, 공모기간, 사업기간, 예산, 사업내용, 사후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추진체계와 사업내용, 사후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운영주체, 운영 예산, 유지관리방안에 관하여 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사업 선정방식의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지역역량이 미흡한 대상지 선정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역량이 있는 곳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역량에 의한 대상지 선정으로 지역역량이 미흡한 곳은 점점 낙후되고 소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되므로 지역역량이 있는 곳과 경쟁공모가 아닌 사업이 필요한 곳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경쟁공모 방식을 완화하는 대신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지역역량을 향상시켜 사업 완료 이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선정부터 성과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정해야 하며, 사업 선정기준의 표준을 만들고 사업 유형에 따라 추가 기준을 만들어 사용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상지 선정은 지역역량이 있는 곳, 지역역량은 없지만 성과 확보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는 방식과 사업 선정기준을 제시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사업 공모기간은 주민의 견수럼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10년 등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는데 마을의 역량 및 사업내용에 맞게 단축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참여주체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유연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보다 지역의 창조적 계획 수립을 위해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에 집중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가 좋거나 타 사업 추가가 필요한 곳은 지원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제안되었다.

사업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평가 실시 등 주관부처의 관리 감독 역할이 아닌 지원주체로서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 역할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업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이나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커뮤니티와 CPTED 내용을 반영하는 등 사업의 융합과 연계, 중장기적이고 입체적인 계획과 사업내용, 역량강화 사업 강화로 사후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후 운영관리 측면에서 사업 운영 협의체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마을 활동가 육성을 위한 노력, 총괄 코디네이터와 같은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 간 갈등이 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갈등관리 방안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운영재원과 시

설 운영은 지자체에서 사전에 마련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면서 사업 결과물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및 성과측정지표에 의한 평가 강화, 시·군 종합평가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과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후 운영관리를 개선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표 1-3]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선행연구 검토 결과)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사업 선정 방식	대상지 선정	- 지역역량이 부족한 곳 선정으로 사후관리 미흡
		- 지역역량이 있는 곳 선정
		- 지역역량이 있는 곳과 사업비 일부라도 공모가 아닌 곳 선정(성과평가 강화, 경쟁 공모 완화)
		- 성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곳 선정
	공모기간	- 표준 사업 선정기준 제시
		-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간 확보
	사업기간	- 사업 완료까지 너무 긴 기간 소요
		- 마을 역량 및 사업내용에 따라 단축
	사업예산	- 참여주체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 단계별,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 추진 방식	사업내용	-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의 유연한 통합
		- 지역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집중
	사후지원	- 사업 세부유형 구분 제거
사업 평가 방식	사후지원	-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타 사업 추가 시행 지원
		-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추진체계	- 매년 사업평가 실시 등 주관부처와 지자체 간 수직적 조직체계 형성	- 주관부처의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과 피드백 필요 -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및 규모 변경 필요 - 주관부처_지자체_추진단의 상시 의사소통 필요 - 계획 수립, 집행, 운영 등 지자체의 독립적 조직 유도 필요
사업 추진 과정	- 단위시설과 가로중심 사업의 평면적 계획 - 프로그램 간 통합성 결여 - H/W와 S/W사업의 연계성 부족 - 주민역량강화 S/W 프로그램 미흡	- 커뮤니티 및 CPTED 등의 사업과 융합화 필요 - 커뮤니티 및 공동체 갈등 등 사회적 측면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단위사업의 집적 및 중첩, 입체적 계획으로 전환 필요 - 역량강화 → 사업 → 역량강화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 방식 필요 - 연계 가능한 사업의 패키지 지원 - 장기적 및 융복합적 사업내용으로 접근
사후 운영 관리	운영주체 - 주민 역량부족 - 주민 및 인적투입 제한 - 주민갈등이 사후관리에 영향	- 협의체 작동, 마을 활동가 육성 필요 - 총괄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활용 - 지속적인 역량강화 노력 - 지자체_주민_전문가 등 협의체계 상시적 운영 - 주민갈등관리 방안 필요
	운영예산 - 운영관리 기금 부족	- 지자체의 운영재원 및 시설 운영 관련 규정 사전에 마련 필요
	유지관리 방안 - 지역특성 반영하지 못한 사업계획 - 시설물 기능과 역할의 한계	- 정기적 모니터링 및 사후 프로그램 체계 마련 - 현장평가 강화 - 성과측정지표 활용하여 평가 - 시·군 종합평가에 관련 지표 추가

* 연구자의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은 회색으로 표시

3.2 공모사업의 추진방식

1)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협약

농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지역 시·군 113개 중 매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며,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업비 매칭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진행된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은 365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서비스 공급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농촌 어디서나 불편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반경 500m이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반경 300m이내의 거점지구내 핵심시설을 입지하도록 하고, 이는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복합화 및 단지화하여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크게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부대사항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며, 기초생활기반확충에는 돌봄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와 같은 생활SOC뿐만 아니라 지붕 및 담장정비나 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사업도 포함된다. 지역역량강화사업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육성,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 등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대사항에는 기본/실시설계와 사업추진 시 필요한 PM단과 추진위원회 활동 예산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이들 사업은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기반확충을 거점지 중심으로 조성하고 이를 배후마을의 주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며, 사업완료 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S/W사업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은 타 부처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단계 사업에서 조성된 시설에 대한 배후마을 주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배후마을 주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물리적·기능적 연계 강화를 위한 2단계 사업을 추가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들 사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업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최대 150억 원,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최대 40억 원이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전담부서 설치 또는 타 중심지와 연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시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는 광역계획지원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협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이행과정 모니터링, 사업 완료·준공지구 성과 평가 등의 수행 또는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에서는 PM단을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지원,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곳, 사업의 시너지가 예상되는 곳에 추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요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 기반확충	보육	공동육아센터·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 학습방 등
	문화·체육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등),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복지	주민공동이용시설(예: 작은목욕탕·찜질방, 이미용시설 등), 다목적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전달시설 ¹⁾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등
	보건·의료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다목적 의료·보건시설,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장비 등
	교통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연계 교통시스템 등
	주택 및 거주환경 개선	빈집 철거·정비·개축,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재해·안전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장비,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 관련 비품·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역역량강화	지역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²⁾ ,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기획 설계· 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부대사항	사업지원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식품부, 2021)

1)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2단계 사업 시)에 한해 가능, 타용도 전용 및 사유화 불가

2)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2단계 사업 시)만 해당

▼ [표 1-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개요

구분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 역량강화
지원한도(억 원)	150+ α 이하	40 이하	3+ $-\alpha$ 이하
시행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1년 이내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30% 이내	30% 이내	-
추가지원 사업비 (α 지원분야)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사후관리까지 담당) : 10억 원 - 시·군청 소재지 읍, 타 중심지(읍·면)와 연계 시 : 30억 원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 원	-	- 시·군이 중간지원조직 등을 시·군 역량강화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운영 : 1억 원
전문가 참여	중앙계획지원단 ¹⁾ : 농식품부	○	-
	광역계획지원단 ²⁾ : 시·도	○	○
	기초계획단(PM단) ³⁾ : 시·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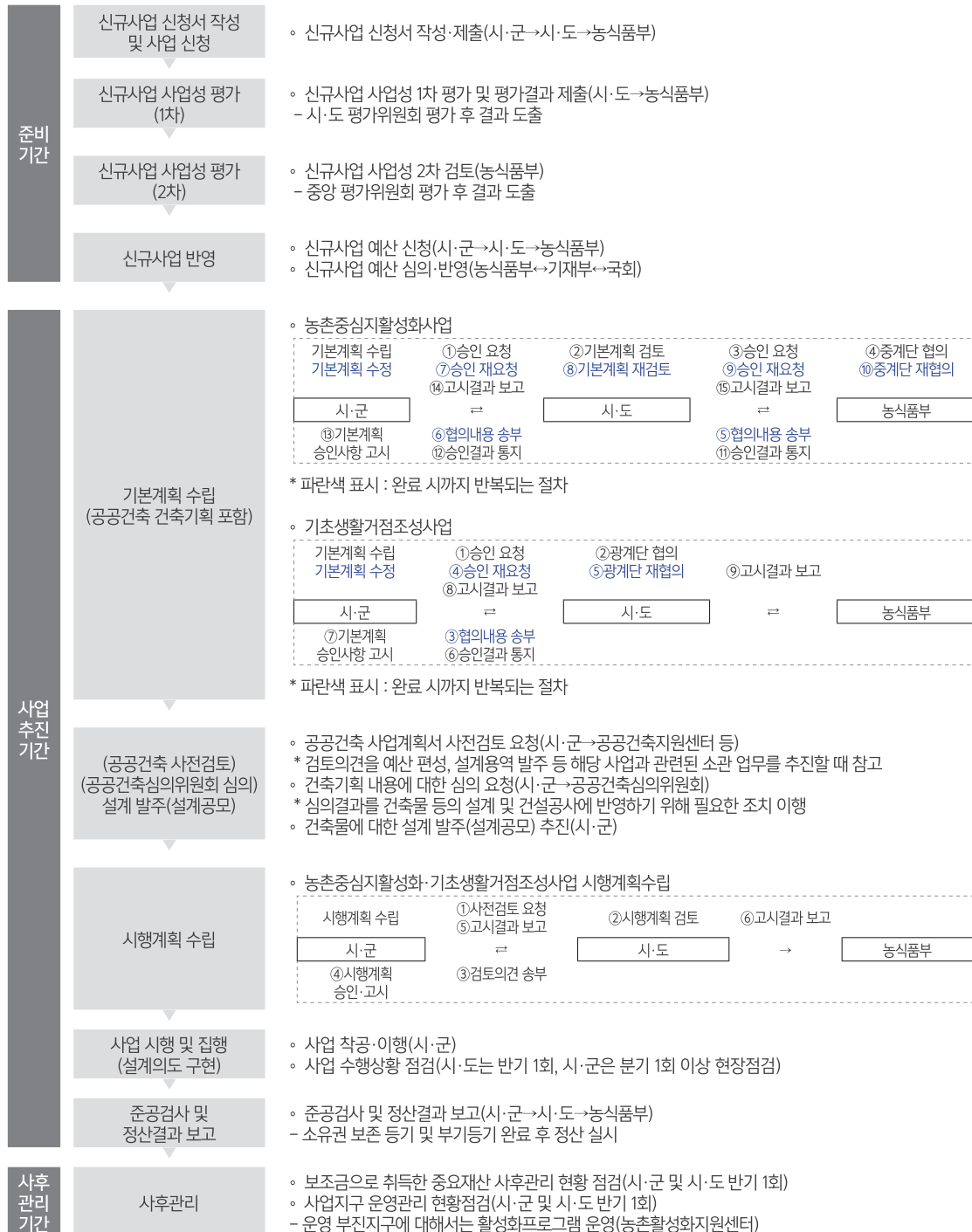
*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농식품부, 2021) 참고하여 재구성

- 1) 중앙계획지원단 : 전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사전협의, 중심지활성화 부
진지구 현장방문 등
- 2) 광역계획지원단 : 중앙계획지원단의 권역별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 시·도의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사전협의,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평가
- 3) 기초계획단(PM단) : 시·군의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총괄 조정/자문/검토, 준공지구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시·군에서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면 시·도에서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전달하
면 1차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에서 시·도에 전달, 시·도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다시 농식품부에 전달
하면 농식품부의 중앙 평가위원회가 2차 검토 후 신규사업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 선정된 시·군에
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경우, 시·도에서 검토 후 농식품부에 승
인을 요청하면 농식품부 중앙계획지원단의 협의 결과를 시·도에 시·도가 시·군에 전달하면 시·군에
서는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시·도, 농식품부에 승인을 재요청하는 순서가 반복되면서 계획 내용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경우 농식품부의 중앙계획지원단 대신 시·
도의 광역계획지원단의 협의와 승인을 받게 되는 점이 다르다. 건축물의 경우 설계비에 따라 건축
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사전검토 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또한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 현황 점검을 시·군 및 시·도가 반기에 1회씩, 사업운영 부진 지구
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시스템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체계



* 자료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식품부, 2021)

한편, 농촌협약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농촌분야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113개 시·군 중 20곳을 선정하여 농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하는 제도로써 2019년 12월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약기간은 5년이며, 개소당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촌협약은 지역 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사업추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또는 농발계획 등 해당 시·군 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농촌협약을 하고자 하는 시·군에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또는 농발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는 농촌분야 농식품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민간 투자사업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 제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3개로 구분되고, 이 중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해당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마을만들기, 농촌형 교통모델,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필수정책으로 농촌협약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경관보전직불제, 신활력플러스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농식품부 사업 외에도 문제부의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타 부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예시를 제시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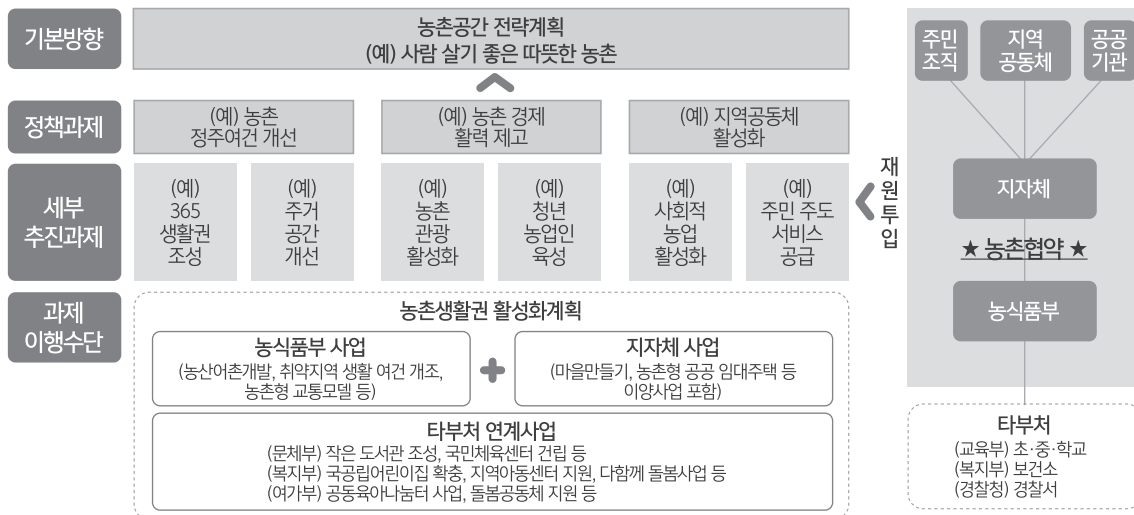
2022년에는 농촌재생뉴딜사업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이 또한 농촌협약의 필수정책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하고, 농촌공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재생뉴딜사업은 농촌지역의 축사, 공장,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의 개보수·철거·이전·집적, 마을 및 경관 정비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계획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군 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특정 지구(읍, 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농촌협약에 따른 국비 최대 300억 원에 추가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을 담당하는 시·군 전담부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협약의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군, 지역주민 대표, 지역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 조직 및 지자체 계획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즉 농촌협약에 의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주민, 전문가, 활동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제조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표 1-7]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요

구분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간적 범위	20년	5년
공간적 범위	시·군	시·군 내 생활권
기본개념	시·군의 장기 발전계획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의 사업들의 통합계획
주요내용	-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접근성 현황 - 시·군 전체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및 목표 - 각 생활권별 향후 개선 방향	- 해당 생활권의 개선·활성화를 위한 비전·목표 및 추진 과제 - 협약 당사자 구성 및 추진체계 - 세부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 추진 예정 사업목록, 예산·자원, 일정 등 - 정책과제별 성과목표 및 관리계획
사업예시	- 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제시, 별도의 사업은 미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기초생활거점사업 - 마을만들기사업(지방이양사업) - 농촌형교통모델 -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 출처 : 2021년 농촌협약 추진계획(농식품부, 2021)



* 출처 : 2021년 농촌협약 추진계획(농식품부, 2021)

[그림 1-2]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한편 농촌협약 체결 대상 선정 절차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등록하면 해당 시·도에서 평가 후 추천 시·군 목록을 농식품부에 제출한다.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에서는 사전검토를 한 후 지자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 후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한다. 선정된 시·군의 전략·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협의와 자문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와 심의 후 대상 사업과 국비 규모를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식품부와 시·군/시·도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등 착수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농식품부의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자체의 의지와 읍·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의 빈집 정비를 정책과제에 포함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촌공간 전략계획은 60%,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40% 배점이며, 농촌공간 정비계획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우선 농촌공간 전략계획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계획의 기본방향이나 현황 조사 분석이 잘 되어 있는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배점이 가장 높고, 지자체가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전담지원조직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사후 지역사회의 자립도 등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에서도 알 수 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과의 연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계획 및 사업 대상지의 타당성, 사후 운영관리, 통합관리 등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농촌공간 정비계획은 유해시설 또는 빈집을 어떻게 이용 및 활용할 것인지, 예산이나 투자계획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표 1-8] 농촌협약 체결 시·군 선정 및 추진 절차

구분		내용	비고
시·군 선정	농촌협약 신청	- 신청서 제출(공문)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농촌공간정비계획 포함) 제출 및 RAISE 등록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도 평가	- 평가위원회가 시·군의 전략·활성화계획 평가 - 추천 시·군 목록 공문 제출	시·도 → 농식품부
	중앙 평가(사전검토)	- 신청서 및 전략·활성화계획 사전검토	농식품부
	중앙 평가(대면평가)	- 전략·활성화계획(예비) 지자체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을 평가 - 평가위원회에 의해 신청서 및 전략·활성화계획 평가 후 위원별 검토의견 작성	농식품부
	전략·활성화계획 보완	- 전문가 등 협의·자문 등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정·보완 - 농식품부 사업부서의 의견수렴·반영	농식품부, 시·군/시·도
농촌협약 추진	활성화계획 검토· 심의	- 농촌정책국 정책협의회에서 활성화계획을 검토·심의·승인 - 대상 사업 및 국비 규모 확정	농식품부
	농촌협약 체결	- 농식품부 - 시·군/시·도 등 간 농촌협약 체결	농식품부, 시·군/시·도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 착수	- 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설계 등 착수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 등 투자	시·군

* 자료 : 2021년 농촌협약 추진계획(농식품부, 2021)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 [표 1-9] 농촌협약 체결 시·군 선정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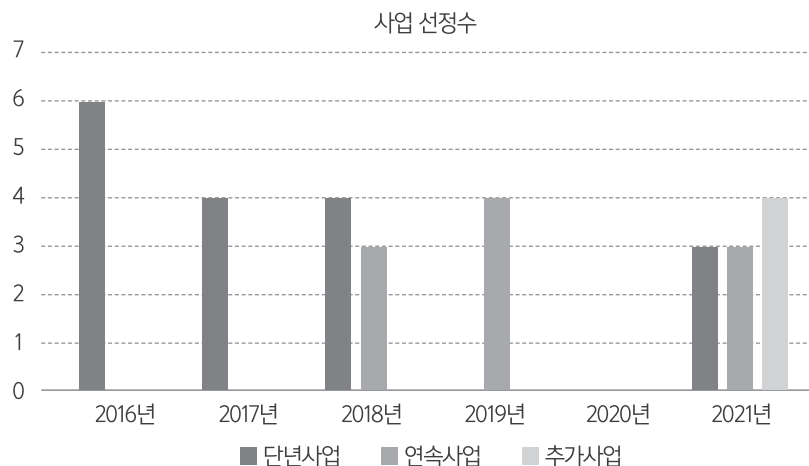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전략계획 (600점)	전략계획의 타당성(360점)	- 일반현황 및 여건 조사, 분석(60) -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조사, 분석(90) -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120) - 농촌공간 발전계획 수립(90)
	지자체의 추진의지·준비도(120점)	- 행정의 의지 및 준비도(60) - 협력관계 구축(60)
	투자 및 관리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90점)	-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30) - 운영계획의 지속가능성(60)
	농촌협약의 도입 필요성(30점)	-
	가감점(+/-30)	- 가점 : 빈집정비 포함, 모든 전제조건 이행, 농촌협약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감점 : 평가 안내 사항 준수 여부, 증빙자료 및 제반 서류의 진위성
생활권 계획 (300점)	사업추진 가능성(75점)	- 사업추진여건(15) - 사업대상지 입지적정성(30) - 사업계획의 실행력(30)
	지역의 추진의지·준비도(30점)	-
	계획의 타당성(135점)	- 농촌공간 전략계획과의 연계성·충실성(60) - 연계사업의 적정성(15) - 필수과제(30) - 선택과제(30)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지속가능성(60점)	- 통합관리계획의 적정성(30) - 사후 운영계획의 적정성·지속가능성(30)
	계획의 적정성(30점)	- 현황 및 여건 진단 적정성(5) - 의견수렴 충실성 및 동의 정도(5) - 계획의 연계성(10) - 목표와 지구 선정의 적정성(10)
활성화 계획 (400점)	공간정비계획(100점)	- 부지 활용 방향 적정성(10) - 토지이용 구상의 구체성(15) - 기타 관리계획 수립 여부(5)
	투자 및 관리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30점)	- 투자계획의 적절성(15) - 예산 조달 및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15)
	지역의 추진의지·준비도(10점)	-
	가감점(+/-30)	- 가점 :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이 2019년 대비 큰 경우,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률이 83%이상, 선택과제 이행을 위해 제시한 모든 사업 추진이 100%확정인 경우,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감점 : 마을만들기 사업이 2019년 대비 작은 경우,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률이 70%이하, 평가 안내 사항 준수 여부, 증빙자료 구비여부 및 제반서류의 진위성

* 자료 : 2021년 농촌협약 추진계획(농식품부, 2021) 자료 연구자가 재구성

2)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문체부는 2016년 공공디자인진흥법을 제정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2018년에 실행함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시범프로젝트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문체부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2016년 6곳, 2017년 4곳을 1년간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2018년부터는 단년사업 4곳과 2년 연속사업을 3곳 선정하고 있다. 2년간 추진하는 연속사업은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또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지원과 기본계획 및 설계, 시공, 프로그램 운영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원 방식을 다원화 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에는 2년 연속사업 대상지를 4곳 선정하였으며, 2021년에는 단년사업 3곳과 연속사업 3곳, 하반기에 추가로 단년사업 4곳을 선정하여 총 10곳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내용과 방식에 따라 사업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사업 선정수 역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선정 현황

사업내용은 문체부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토대로 생활안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편의, 시설 및 공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 공간, 시설물, 매체 등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추진체계에 있어서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기존의 사업 추진방식과 달리, 사업 신청단계부터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익의 목적을 갖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업 예산 집행 등 사업 감독, 행정지원,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등

의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또한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각 분야 전문가를 컨설팅단으로 구성, 사업 선정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사업 총괄 PM을 지정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선정은 서류심사, 서류심사를 통과한 대상지의 사업계획 발표심사의 최종심사를 진행하고 최종심사를 통과한 대상지에 대한 현장실사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은 주민 의견수렴, 행정의 역량 및 사업추진 일정과 예산수립 적정성, 사업대상지 및 내용의 적정성, 사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 [표 1-10]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구분		2019	2021
지원 한도	단년	-	- 상반기 선정 : 3.7억 원(국비(5) : 지방비(5)) - 하반기 선정 : 3억 원 내외(지방비 매칭 의무사항 없음)
	연속	1차년도 : 개소당 1.2억 원 내외(국비(7) : 지방비(3))	1차년도 : 개소당 2억 원(국비(5) : 지방비(5))
사업내용		•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범죄예방, 교통안전, 재난대비 안전을 위한 디자인 •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 보행환경조성,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문화·생활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행정서비스 디자인 •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안내체계 및 체육관광시설 조성,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 •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동네 맞춤형 디자인, 도시 품격저해 시설 개선, 도시 틈새공간 활성화, 환경조명 디자인, 공공시각이미지 품격제고 및 품질관리	
추진 체계	문체부, 한국공예 디자인문 화진흥원	• 문체부 : 공공디자인 사업 총괄 및 정책 지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대상지 선정 및 평가, 운영지원(추진상황 관리, 사업 참여주체 중재, 사업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컨설팅단 운영 및 컨설팅 지원)	
	도/기초 지자체	지방비 확보, 사업 PM 추천 및 사업수행기관 지정, 사업수행기관 지원 및 관리, 사후 유지관리	
	사업수행 단체	사업 집행 및 정산, 사업 PM 의견 반영 및 행정지원, 추진협약체 구성 및 운영(주민_시민단체_관련 기관_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자료 : 사업 공모요강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2021년에 처음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유형은 2가지이며, 공공디자인 제도 및 조직 등 디자인 행정역량 향상을 위

한 컨설팅,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거나 또는 디자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디자인 개발 및 개선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해 개소당 3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지별 주요 성과는 자료집으로 구성하여 전국에 배포한다.

▼ [표 1-11]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

구분	주요내용
사업비	개소당 3천만 원 상당 지원
선정수 및 사업기간	4개소, 4개월
사업내용	• 공공디자인 기반 조성 :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 초기 단계의 컨설팅 지원 : 예) 관련 제도 제/개정, 조직 개편, 전략 도출, 업무 매뉴얼 개발 등 • 공공디자인 활성화 컨설팅 :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 중·장기 단계의 컨설팅 지원 : 예) 표준디자인 개발, 시범적용 점검 및 개선안 도출 등
지원내용	- 사업 계획 및 특성별 맞춤형 전문가 자문 지원 - 지역별 전담 PM 지정 및 컨설팅 실무 지원 - 컨설팅 적용안 제공(제도/규정 개선안, 디자인 개발안/개선안 등) - 대상지별 주요 성과 아카이빙 및 결과 공유

* 자료 : 사업 공모요강 참고하여 연구자가 재구성

3)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10년 단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전략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서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하고 실태조사 및 사업내용 발굴 등 포괄적인 계획인 반면,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의 대상과 목적을 파악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 [표 1-12]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분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은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아닌 구청장 등도 가능
시간적 범위	10년	-
주요내용	- 도시쇠퇴 진단,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재원 조달 계획 등 - 도시재생 관련 사업·계획, 관련 프로 그램, 유·무형 지역자산 조사 및 발 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종합적 실행계획 - 지역 및 목적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 * 도시경제기반형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고용기반 창출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 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크게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중앙공모사업과 광역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공모방식 사업은 수시 접수를 받아 활성화계획 또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컨설팅 후 결과반영한 것을 재검토,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을 평가 후 선정한다. 사업유형은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인정사업, 혁신지구사업의 3종류이며, 총괄사업관리자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총괄사업관리자사업 중에서도 산업과 경제 측면에서의 기반 시설 정비와 앵커시설을 구축하는 경제기반형이 규모나 사업비가 크고 사업기간 또한 최대 6년간으로 가장 길다. 중심시가지형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최대 5년간 사업이며, 광역공모사업 유형이기도 한 일반근린형과 주거지지원형 역시 총괄사업관리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앙공모사업 중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은 없지만 도시쇠퇴가 진행된 곳으로 점단위 재생사업으로 소규모 점단위 사업이며, 혁신지구사업은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광역공모사업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3가지이며, 사업 선정에 있어 광역시·도 평가위원은 국토부 중앙평가위원회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하면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진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으로 국비를 배정하면 시·도에서 국비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하여 추진한다. 일반근린형은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 주거환경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며 두 사업 모두 4년간 국비 100억 원 내외 지원하고 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공공시설 및 주택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각 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뉴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자체가 각 부처의 도시재생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17개 부처의 72개 중점 연계사업을 제시하고 이 사업들 중 지자체의 활성화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 문화, 건축, 경관, 상업 등 다양한 지역 특화재생 모델을 반영하는 경우 등 사업 선정 시 통합적 및 특화 계획, 사업추진의 용이성, 타 사업과의 연계 등을 우선하고 있다.

▼ [표 1-13]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 및 지원

구분	주요내용
중앙 공모	- 선정수 : 매년 15곳 내외 - 대상 :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 재생 등)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곳 * 사업유형 중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서 추진 가능 *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 반드시 포함, 거점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지와의 연계방안 마련, 공기업 투자계획,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 간 위탁계약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총괄사업 관리자 - 사업비(국비 40~60% 지원) : 경제기반형(최대 250억 원), 중심시가지형(150억 원), 일반근린형·주거지지원형(최대 100억 원) * 사업비는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국비 지원 * 경제기반형(최대 6년간) : 유휴·노후화된 산업·경제 거점과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앵커 시설 구축 * 중심시가지형(최대 5년간) : 원도심 기능 회복, 재래시장 등 상권 경쟁력 강화, 역사·문화·관광 산업 연계, 지자체의 도시계획적 수단 복합 - 규모 : 경제기반형(20~50만㎡ 내외), 중심시가지형(20만㎡ 내외)
	인정사업 - 선정수 : 매년 50곳 내외 - 대상 :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 - 사업비(국비 40~60% 지원) : 10억 원~ 50억 원 - 규모 : 토지면적 10만㎡ 미만의 소규모 점단위 사업
	혁신지구 - 선정수 : 매년 5곳 내외 - 대상 :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
광역 공모	일반 근린형 - 대상 :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 내용의 사업 - 규모 : 15만㎡ 내외의 구역 - 사업기간 : 4년 - 사업비 : 100억 원 내외(국비)
	주거지 지원형 - 대상 :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유도 - 규모 :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 지역 - 사업기간 : 4년 - 사업비 : 100억 원 내외(국비)
	우리동네 살리기 - 대상 :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설치, 소규모 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유도 - 규모 :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 - 사업기간 : 3년 - 사업비 : 50억 원 내외(국비)

* 자료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 도시재생 관련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0)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이 외에도 주민이 1년 또는 2년의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 3~4개 내외를 발굴하여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1곳당 국비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방법·성과를 체감하는 준비사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H/W사업과 재생학교 운영·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S/W사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준비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총 6개월간이며 전국에서 20개 팀을 선정하여 3개월 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구체화 및 기획과 기획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이 중 우수한 10개 팀을 선정하여 기획한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기사업비의 일부 1,500만 원 지원, 3개월 간 전문가 컨설팅을 추가 지원한다.

위의 2개의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전단계에서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을 주민들이 경험해보도록 하는 마중물 사업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표 1-14]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구분	소규모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선정수	약 70곳	1단계 : 20개 팀 선정 → 2단계 20개 팀 중 우수한 10개 팀 선정
사업기간	1~2년	3~6개월
사업비	1개소당 최대 2억 원(국비)	- 1단계(20개 팀) : 전문가 컨설팅(사업 기획) 소요 경비 5백만 원 - 2단계(10개 팀) : 기획한 사업 실현 초기사업비(15백만 원), 3개월 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내용	- 주민거점공간·공동육아방 등 주민공동공간을 조성하는 H/W사업 - 재생학교 운영 및 마을축제 개최 등 주민역량을 키우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S/W사업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노인돌봄 등 커뮤니티 서비스, 지역특산물 제작 및 판매,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사업아이템을 발굴
대상	- 뉴딜사업 전에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직접 경험하고 재생의 필요성, 방법, 성과를 체감하는 준비를 하고자 하는 지역	-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중인 지역

* 자료 : 도시재생 관련 보도자료(국토교통부, 2020)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

4) 소결

우선 농식품부 사업별 특성과 추진체계를 비교 분석해보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주민의 생활인프라 이용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축, 공간, 시설물 등 종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가 40억 원부터 150억 원 내외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규모와 사업비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반영 여부까지 확인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반드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수시로 자문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시·도, 사업추진 주체인 기초지자체가 중간평가를, 사업 완료 후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부진지구에 대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와 사업 추진주체와의 협약 체결 시 선정된 계획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농촌협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식품부에서 전문가의 평가 및 검토와 반영 여부까지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가 결정된다.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 마을만들기 사업 확대, 중간지원조직 운영 시 대상지 선정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 수립된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3년차와 5년차에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비와 내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성과 결과 중심의 추진체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대표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며, 이 사업의 준비사업적 성격을 가지는 소규모재생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다. 3개 사업 모두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되며,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최대 6년까지, 사업비는 최소 5백만 원~250억 원까지로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 지원이 상이하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공모신청 전에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전문가의 평가와 수정사항 반영을 통해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사업을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연차별로 사업성적을 평가하여 예산을 증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의 경우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사업과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가 지원 사업은 3천 만원 지원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나 조직 지원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사업비 지원 방식은 1년 단년사업과 2년 연속사업으로 구분되며, 2년 연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또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며 1차년도 결과평가 후 연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성과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역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문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표 1-15]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구분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농촌협약
대상지 규모	읍/면 소재지	읍/면 소재지	시·군
선정방식	공모	공모	공모
선정단계 인센티브	- 5인 이상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시·군청 소재지 읍, 타 중심지와 연계시 -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지자체의 의지, 읍·면 소재지 및 배후 마을의 빈집 정비 포함 -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마을만들기사업 예산 전년대비 증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집행률, 제시한 사업 추진 확정 - 타 부서 사업 연계, 통합
매칭비율	국비(7) : 지방비(3)	국비(7) : 지방비(3)	-
사업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사업비	150억 원+α (사업별, 규모별 차등지급)	40억 원 이하 (사업별, 규모별 차등지급)	국비 최대 300억 원
계획서 작성 및 계획수립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예산 반영 → 기본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계획 또는 농발계획 수립,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의무
사업 선정 및 추진체계	- 시·군 신청서 제출 → 광역시·도 → 농식품부(전문가 사업성 검토) → 예산수립 → 시·군기본계획수립 → 광역시·도(전문가 검토) → 농식품부(전문가 계획 수정, 보완 요구) → 시·군 반영 → 사업추진 - 사업주체(시·군)가 용역사 선정, PM단 운영	- 시·군 신청서 제출 → 광역시·도 → 농식품부(전문가 사업성 검토) → 예산수립 → 시·군기본계획수립 → 광역시·도(전문가 계획 수정, 보완 요구) → 시·군 반영 → 사업추진 - 사업주체(시·군)가 용역사 선정, PM단 운영	- 시·군계획수립 → 신청 → 시·도평가 → 농식품부(전문가 평가, 자문) → 시·군 계획수정 및 보완(전문가 자문) → 최종 선정(국비 규모) → 협약체결 → 시·군 기본계획 수립 → 사업추진 - 타 부처 연계사업 시 가점 부여 - 통합적/연계 관점에서 접근
사업관리 및 지원	모니터링,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 상 자문		시·군 전담부서, 사업 총괄 부서 반드시 설치
중간평가 (현장평가)	시·도는 반기 1회, 시·군은 분기 1회 이상 점검		3년차/5년차에 실시 (사업비/내용/기간 조정)
성과평가	전문가 성과 평가		성과평가를 통해 협약기간, 내용 조정
사후관리	운영관리 현황점검, 운영 부진지구에 대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표 1-16] 국토교통부 사업

구분	도시재생뉴딜	소규모재생	주민역량강화
대상지 규모	20~50만㎡내외, 20만㎡내외, 15만㎡내외, 10만㎡내외, 5만㎡내외 등 거점 및 주거지	소규모 점단위	도새재생 사업 준비중인 지역
선정방식	공모(중앙부처, 광역시·도)	공모	공모
선정단계 인센티브	- 17개 부처의 72개 중점 연계사업 포함 - 통합적 및 특화 계획	-	-
매칭비율	- 특별시 : 국비(4) : 지방비(6) - 광역/특별자치시 : 국비(5) : 지방비(5) - 기타 : 국비(6) : 지방비(4)	-	-
사업기간	3년 ~ 최대 6년(사업유형별)	1~2년	6개월
사업비	10억 원~250억 원(사업유형별)	최대 2억 원(국비)	5백만원, 5백만원 + 15백만원
계획서 작성 및 계획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가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	-
사업 선정 및 추진체계	- 중앙공모 : 지자체 활성화 계획 → 국토부 (적정성 검토) → 지자체 수정 반영 → 국토부(타당성 평가) → 특위 심의 → 선정 - 광역공모 : 지자체 활성화 계획 → 광역 시·도(전문가 평가) → 국토부(타당성 평가) → 특위 심의 → 선정 - 광역공모의 경우 배정된 국비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 선택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자원 및 여건 조사 → 지자체가 현황 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작성, 사업 신청 → 국토부(평가, 심사) → 선정	도시재생센터 + 지역주민이 사업 아이템 발굴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선별 → 운영비, 초기 사업비 일부 지원
사업관리 및 지원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업관리 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에 반영	-	-
중간평가 (현장평가)	- 연차별 사업평가 후 예산 일부 증/감	-	-
성과평가	-	-	-
사후관리	-	-	-

▼ [표 1-17]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구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지역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
대상지 규모	-	-
선정방식	공모	공모
선정단계 인센티브	-	-
매칭비율	국비(5) : 지방비(5) 또는 지방비 매칭 의무사항 없는 경우도 있음	-
사업기간	단년, 연속(2년)	4개월
사업비	- 단년사업 : 3억원~3.7억원 - 연속사업 : 1차년도 1.2억 원~2억원	- 3천만원
계획서 작성 및 계획수립	- 연속사업 대상지는 1차년도 사업으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또는 마스터플랜 수립	-
사업 선정 및 추진체계	- 사업수행기관+지자체 신청 → 문체부(평가단 평가 및 선정, 사업 총괄 PM 선정) → 사업 추진	- 지자체 신청 → 문체부(전문가 구성 및 대상지 선정) → 컨설팅 실행 및 적용안 도출 → 결과 적용 및 성과 취합
사업관리 및 지원	- 공공기관 및 공익의 목적을 갖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이 사업 수행 - 문체부에서 선정한 총괄 PM이 지원	-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 조직, 업무 매뉴얼 개발 지원 - 공공디자인 중장기 사업 컨설팅 - 문체부에서 전문가 선정, 지원
중간평가 (현장평가)	- 연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 결과평가에 따라 연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평가	-	결과자료집 내 성과 수록
사후관리	-	

이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은 단발성 단기사업보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더하여 타 부처 사업과의 융복합/연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계획 수립과정부터 단계별로 지원하도록 하거나 중앙부처가 직접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규모와 사업기간, 사업비의 차별화를 통한 단계적 사업을 제안하여 사업 경험을 통한 지역역량 향상을 유도하면서 지자체가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중간평가 및 사업 완료 후 사후 지원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앙부처 사업을 중장기 종합분야 사업과 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때, 중장기 종합분야 공모사업이 상대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부분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표 1-18] 중앙부처 중장기 종합분야 공모사업 추진체계(농식품부, 국토부)

구분	개선방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 광역공모 (국토부)
사업 선정 방식	대상지 선정	지역역량(사업추진전략, 행정조직 역량, 지역 공동체 참여)이 있는 곳 선정	○
		지역역량 미확보된 곳 선정	X
		성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곳 선정, 성과평가 강화	○
	공모기간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 기간 확보	-
	사업예산	단계별,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유형	사업 세부유형 구분 제거	○
사업 추진 과정	추진체계	주관부처의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과 피드백	X
		사업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및 규모 변경	○
		주관부처_지자체_추진단의 상시 의사소통 필요	X
	사업내용	각 분야 전문가 단계별 자문 지원	○ △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
		커뮤니티 및 CPTED 등의 사업과 융합화	○
		커뮤니티 및 공동체 갈등 등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	○
		단위사업의 집적 및 중첩, 입체적 계획	○
		역량강화+사업+역량강화의 지속성 확보	X
		연계 가능한 사업의 패키지 지원	○
		장기적 및 융복합적 사업내용	○
		참여주체 거버넌스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확보	○
	사후 운영 관리	협약체 육성	○
		전문가 활용	X
		지자체_주민_전문가 협의체계 상시적 운영	X
		운영재원 및 시설 운영 규정 마련(지자체)	○
		정기적 모니터링 및 사후 프로그램 마련	○ △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
		현장평가 강화	X
사후 운영 관리	유지관리 방안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타 사업 추가 시행 지원	X

▼ [표 1-19] 중앙부처 단기 공모사업 추진체계(문체부, 국토부)

구분	개선방안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문체부)	소규모재생사업 (국토부)
사업 선정 방식	대상지 선정	지역역량(사업추진전략, 행정조직 역량, 지역공동체 참여)이 있는 곳 선정	△	X
		지역역량 미확보된 곳 선정	X	○
		성과 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곳 선정, 성과평가 강화	X	X
	공모기간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 기간 확보	-	-
	사업예산	단계별, 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
	사업유형	사업 세부유형 구분 제거	X	○
사업 추진 과정	추진체계	주관부처의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과 피드백	○	X
		사업 중간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및 규모 변경	X	X
		주관부처_지자체_추진단의 상시 의사소통 필요	X	X
		각 분야 전문가 단계별 자문 지원	○	△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리)
	사업내용	커뮤니티 및 CPTED 등의 사업과 융합화	X	△ (내용 제한 없음)
		커뮤니티 및 공동체 갈등 등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	X	△ (내용 제한 없음)
		단위사업의 집적 및 중첩, 입체적 계획	X	X
		역량강화+사업+역량강화의 지속성 확보	X	X
		연계 가능한 사업의 패키지 지원	X	X
		장기적 및 융복합적 사업내용	○	X
	사업기간	참여주체 거버넌스 운영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확보	△	○
사후 운영 관리	운영주체	협의체 육성	X	X
		전문가 활용	X	X
		지자체_주민_전문가 협의체계 상시적 운영	X	X
	운영예산	운영재원 및 시설 운영 규정 마련(지자체)	X	X
		정기적 모니터링 및 사후 프로그램 마련	X	X
	유지관리 방안	현장평가 강화	X	X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타 사업 추가 시행 지원	X	X

II.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특성

1. 경기도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²⁾

1.1 사업 추진현황

경기도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추진되어 오던 공공디자인 개념의 인식 확산 도모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추진하였다.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후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공공디자인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조례의 작동을 위해 시범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근거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이며, 이 가운데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범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길찾기 기능 개념의 3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 [표 2-1]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유니버설 디자인	1개소	-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일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2개소	2개소	2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길 찾기	해당 없음						2개소	일몰

1) 시범사업 1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모든 도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디자인 기반을 확대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하였다.

2) ㈜투엔티플러스 채완석 부대표(전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장)가 작성한 원고를 참고하여 작성

추진 근거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제12조(2013.11.11. 제정)³⁾,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011.4.)⁴⁾,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표준설계 디자인 개발(2014.12.)⁵⁾이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확산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공간, 안전취약공간 등을 대상으로 도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개소당 사업비 5억 원, 도비와 시·군비 3:7 매칭이며, 2014년 시범 추진 후 매년 5개소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2] 연도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명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사업량	1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사업비	5억 원 (도비2 / 시비3)	5억 원/개소 (도비1.5 / 시·군비3.5)	5억 원/개소 (도비1.5 / 시·군비3.5)	5억 원/개소 (도비1.5 / 시·군비3.5)	5억 원/개소 (도비1.5 / 시·군비3.5)	5억 원/개소 (도비1.5 / 시·군비3.5)
총 예산	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사업 내용	종합복지회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내외 환경 개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통학로 전체의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안전취약공간 환경 개선
신청	김포, 고양, 연천, 광명, 성남	용인, 평택, 안산(2), 부천	양평, 용인, 의정부, 구리, 광주	포천, 이천, 구리, 광주, 파주, 남양주, 과천	광주, 구리, 부천, 성남, 시흥, 이천, 포천	동두천(2), 광명, 구리, 이천, 안양, 화성, 양평
선정	성남	평택, 부천, 이천, 광주, 양평	양평, 용인, 의정부, 구리, 광주	과천, 광주, 구리, 남양주, 이천	광주, 구리, 성남, 시흥, 포천	동두천, 광명, 구리, 이천, 안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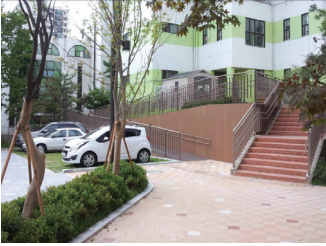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때 시·군과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

4)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에 적용되어야 할 유니버설디자인 대상과 방법을 지침으로 제시

5)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설치기준 및 6개 영역의 표준설계 디자인 제시

2014년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성남시 산성동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실내외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 [표 2-3]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성남시 산성동 복지회관, 2014년)

구분	주출입구 개선 및 보차분리	경사로 설치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이전			
사업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 안심 등·하교길 만들기’를 구현하기 위해 사업 대상을 어린이 통학로로 선정하여 어린이보호 구역을 포함한 통학로 전체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2-4] 어린이 안심 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구리시 인창초등학교, 2017년)

구분	옹벽 개선 및 통학로 확대	영역성 강화	안전사고 예방 시설 정비
사업 이전			

구분	옹벽 개선 및 통학로 확대	영역성 강화	안전사고 예방 시설 정비
사업 이후			

2020년에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그동안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 대상 안전 취약공간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어린이 통학로, 건축물의 접근공간, 사회복지시설의 이동공간, 공원 등 안전 취약공간을 대상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구축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0년을 마지막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 일몰되었으며, 2021년에는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을 주제로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표 2-5]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2020년)

구분	접근성 향상	다목적 화장실로 개선	이동편의 제공
사업 이전			
사업 이후			

2) 시범사업 2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은 취약지역 내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사업의 목적이며,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2013년 6월에 수립된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매뉴얼」과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2013.11.11.)’⁶⁾의 실현을 위해 추진되었다.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4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종합계획」과 2020년 「제2차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과제 실현을 위한 20개 실행원칙과 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3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 중 22개소는 준공하고, 9개소는 공사중 또는 추정 편성 중이다.

▼ [표 2-6] 연도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량	2개소	2개소	2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사업비	5억 원/개소 (도비2/ 시비3)	5억 원/개소 (도비2/ 시비3)	4.5억 원/개소 (도비1.8/ 시비2.7)	4.5억 원/개소 (도비1.35/ 시·군비3.15)	4.5억 원/개소 (도비1.35/ 시·군비3.15)	5억 원/개소 (도비1.5/ 시·군비3.5)	5억 원/개소 (도비1.5/ 시·군비3.5)	5억 원/개소 (도비1.5/ 시·군비3.5)
총예산	10억 원	10억 원	9억 원	23.35억 원	22.85억 원	25억 원	25억 원	25억 원
사업 대상	재개발 해제지역				범죄예방 취약지역 (여성안심구역, 원도심, 원룸, 외국인밀집, 다가구밀집지역)			
신청	고양, 광주, 성남, 안양	구리, 성남, 시흥, 안성, 양주, 연천, 의왕, 평택, 포천	광주, 구리, 수원, 의정부, 이천, 평택, 포천	광명, 광주, 성남, 양주, 양평, 오산, 파주	고양, 과천, 광주, 구리, 남양주, 안양, 양주, 하남	광주, 구리, 남양주, 수원, 이천, 포천,	가평, 구리, 수원, 양평, 용인, 이천, 화성	구리, 광명, 부천, 성남, 시흥, 양평, 여주, 오산, 의정부, 이천, 파주, 화성
선정	고양, 안양	시흥, 평택	의정부, 포천	광주, 성남, 양평, 오산, 파주	고양, 광주, 안양, 양주, 하남	구리, 광주, 남양주, 수원, 포천	가평, 구리, 수원, 용인, 이천	광명, 구리, 시흥, 파주, 화성

6) 제8조에 의해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및 디자인 개발사업,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지정

▼ [표 2-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수원시 서둔동 200번길 일원, 2019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	가스관 범죄예방 장치 설치	담장 개선
		
필로티 내 후면확인용 거울 설치	낮은 담장 방범시설 보강	감응식 야간조명 설치
		

3) 시범사업 3 : 길 찾기 기능 강화 사업

길 찾기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한 사업⁷⁾으로, 사업대상은 거점지, 상점가, 터미널 등이다. 보행공간과 연계한 공공공간, 시설 등의 안내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도민, 외국인 등 모두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은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터미널, 역사 등의 교통 거점지역과 지하상가, 재래시장 등 보행이동 집중구역을 대상으로 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 성격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020년 1년간 사업으로 화성시 향남읍 버스터미널 일원과 안양시 안양역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후 일몰되었다.

이 사업 역시 사업비는 개소당 5억 원,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 3:7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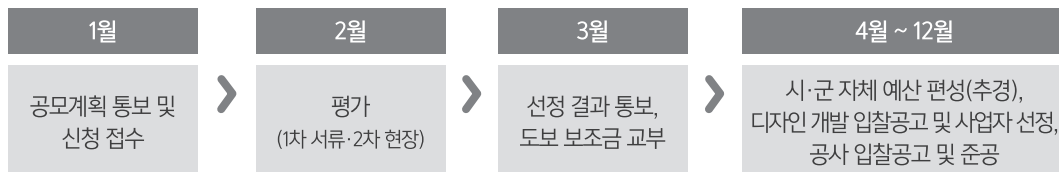
7) 추진 근거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20조(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시/군별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

▼ [표 2-8] 길 찾기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명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
사업량	2개소
사업비	5억 원/개소 (도비1.5/시·군비3.5)
총 예산	10억 원
사업내용	보행공간과 연계한 공공공간, 공공시설 등의 안내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도민, 외국인 등 모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정보 제공 : 교통 거점지(터미널, 역사), 보행이동 집중구역(지하상가, 재래시장) 등
신청	구리, 화성, 이천, 의왕, 김포, 안양, 수원
선정	화성, 안양

1.2 사업 공모절차

매년 1월에 공모사업 계획을 시·군에 통보하고 1월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2월에 1차 서면 평가 및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하고, 3월에 선정 결과 통보 및 도비 보조금을 교부 후,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 확보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는 절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2-1] 시범사업 추진 일정

1.3 사업의 추진체계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사업인 3개 사업 모두 31개 시·군의 적절한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길 찾기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수치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단년도 사업인 특성을 반영하면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1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군별 사업 참여도는 31개 시·군 중 군포시를 제외하면 3개 시범사업에 한 차례 이상 지원하였으며, 참여 횟수는 구리시가 11차례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주시, 이천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개 시범사업의 평균 선정 비율은 56.7%로 15개 시·군은 평균 선정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3개 시범사업에 모두 한 차례 이상 신청을 한 시·군은 화성시, 안양시, 이천시, 구리시 4개 시로 나타났다.

3개 시범사업 모두 추진 방법에서 차이가 없으며, 공모-평가-보조금 교부-시·군 사업 시행의 같은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보조금 교부 후 직접적 사업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전담하며, 주기적인 추진 현황 보고 및 현장 확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

사업 예산 측면에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공공디자인 관련 시범사업의 총예산 규모는 290.2억 원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이 약 150.2억 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130억 원, 길 찾기가 1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도비는 전체 사업비의 약 31.4%인 91.1억 원(유니버설디자인 39.5억 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47.6억 원, 길 찾기 4억 원)이 투입되었다. 3개 시범사업 모두 개소당 평균 사업비를 5억 원으로 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특성상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 비율을 정하였는데 통상 도비 30%를 보조 비율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표 2-9] 시·군별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구분	유니버설		범죄예방		길 찾기		참여 빈도		선정 비율 (%)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수원시	-	-	3	2	1	-	4	2	50.0
고양시	1	-	2	2	-	-	3	2	66.7
용인시	2	1	1	1	-	-	3	2	66.7
성남시	3	2	4	1	-	-	7	3	42.9
부천시	2	1	1	-	-	-	3	1	33.3
안산시	1	-	-	-	-	-	1	0	0.0
화성시	1	-	2	1	1	1	4	2	50.0
남양주시	1	1	2	1	-	-	3	2	66.7
안양시	1	1	2	2	1	1	4	4	100.0
평택시	1	1	2	1	-	-	3	2	66.7
의정부시	1	1	2	1	-	-	3	2	66.7
파주시	1	-	2	2	-	-	3	2	66.7
시흥시	1	1	2	2	-	-	3	3	100.0
김포시	1	-	-	-	1	-	2	0	0.0
광명시	2	1	2	1	-	-	4	2	50.0
광주시	4	4	5	3	-	-	9	7	77.8
군포시	-	-	-	-	-	-	-	-	-
이천시	3	3	4	1	1	-	8	4	50.0
오산시	-	-	2	1	-	-	2	1	50.0
하남시	-	-	1	1	-	-	1	1	100.0
양주시	-	-	3	1	-	-	3	1	33.3
구리시	4	4	6	3	1	-	11	7	63.6
안성시	-	-	1	-	-	-	1	0	0.0
포천시	2	1	3	2	-	-	5	3	60.0
의왕시	-	-	1	-	1	-	2	0	0.0
여주시	-	-	1	-	-	-	1	0	0.0
양평군	2	2	3	1	-	-	5	3	60.0
동두천시	1	1	-	-	-	-	1	1	100.0
과천시	1	1	1	-	-	-	2	1	50.0
가평군	-	-	1	1	-	-	1	1	100.0
연천군	1	-	1	-	-	-	2	0	0.0
계	37	26	60	31	7	2	104	59	56.7

1.4 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

1) 사업의 성과

매년 추진된 시범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시·군이 이해관계자(주민, 학생, 학부모, 상인 등)를 대상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하며,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매우 만족’과 ‘만족’을 선택한 점수를 집계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중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만족도 및 사고예방 효과 조사 결과 만족도는 평균 72.0%, 사고예방 효과는 75.3%로 나타났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해마다 만족도의 편차가 발생하나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표 2-10] 연도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업량	2개소	2개소	2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만족도	96.0%	87.5%	85.5%	95.2%	91.8%	93.5%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과 같은 새로운 디자인 개념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공공디자인 행정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의 경우 무장애디자인과의 차별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편한 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군 자생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업으로 전개하는 등의 효과를 거둔 성과가 있었다.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우 일차적인 실내외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과 함께 교육이나 다양한 지역행사로 이어져 단순한 시설개선만이 아니라 지역 생활 거점으로서의 부차적 역할까지 수행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어린이 통학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우 통학공간의 영역성을 강조하고, 통학로가 없었던 공간에 안전한 통학공간과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정차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한 점이 크다.



[그림 2-2] 성남시 산성동복지회관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그림 2-3] 포천시 포천초등학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가 시각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율 감소 효과로 이어져 실효적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조명으로 범죄 동기를 저감하였으며, 자연감시가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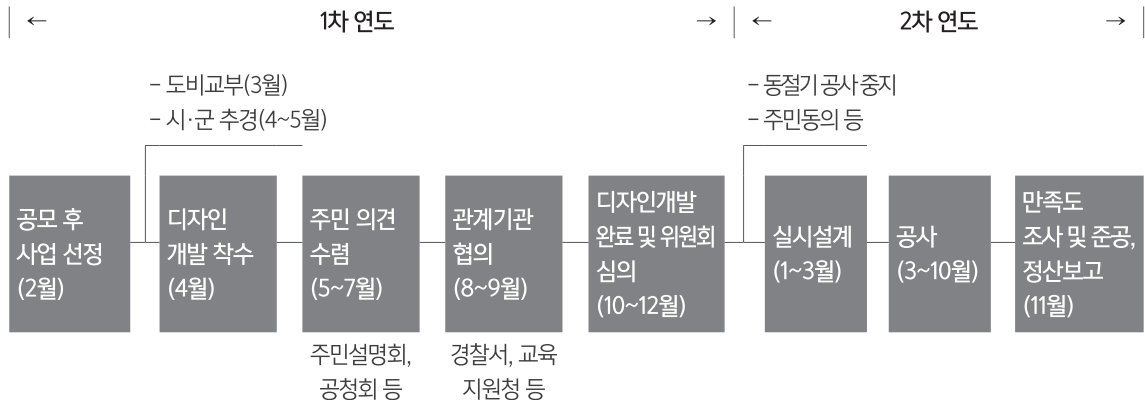
[그림 2-4] 구리시 교문1동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사업 추진의 한계점

① 추진 일정의 부족

3월 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면 시·군은 4월 이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거나 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6~7월에 자체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디자인 개발에서 공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실제 준공 시점은 그 다음 해가 되어 자연스럽게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3월 말 교부된 도비로 디자인 개발 용역을 먼저 추진하여 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계약부서와 이견이 발생하기도 한다.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공사의 입찰공고를 올릴 수 있으므로, 디자인 개발 용역 수행사가 결정되더라도 물리적으로 확보해야 할 용역 수행 기간과 주민 의견 수렴, 관련 기관 협의와 더불어 도비 교부조건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공사 입찰공고를 하게 되고,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동절기에 임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 후 다음 해 연초에 공사를 재개하거나 사고이월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도비가 3월 말에 교부된다손 치더라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 보이므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차연도] 시·군 추경예산 반영(4월), 기본계획 수립(5월), 주민 의견수렴(5~7월), 관계기관 협의(8~9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12월)

[2차연도]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3월), 공사 완료(10월) 후 주민만족도 조사(11월) 실시

[그림 2-5] 실제 시범사업 추진 일정

② 사업비 편성의 제약

예산은 그 해에 목적을 달성하여 전액 소진할 수 있도록 규모있게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단연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시범사업의 경우 시·군의 공모과정에 따른 평가부터 공사 및 준공 처리단계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매년 추진한 시범사업의 준공 시점을 분석해 보면 예산이 편성된 그 해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정산보고까지 마친 경우는 3개 시범사업 전체 59개소의 5.1%인 3건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업비를 교부한 그 다음해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3년 이후에 준공한 사례도 3개 시범사업 전체 59개소의 약 40%인 23건을 차지하여 매년 의회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즉, 단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므로 최소 2년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2-11] 시범사업 준공 시점

(단위 : 개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준공	이월	준공	이월	준공	이월	준공	이월	준공	이월	준공	이월	준공	이월	준공	이월
유니버설 디자인	1	-	-	-	5	5	5	5	5	5	5	5	5	5	일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0	1	-	-	0	2(3)	0	4(1)	0	2(3)	0	1(4)	0	3(2)		
길 찾기	2	-	2	-	2	-	5	-	5	-	5	-	5	-	5	
	1	1	0	2	0	1(1)	2	1(2)	0	2(3)	0	3(2)	0	3(2)	0	5
	-	-	-	-	-	-	-	-	-	-	-	-	2	-	일몰	
	-	-	-	-	-	-	-	-	-	-	-	-	0	2		

* () 는 준공 시점이 2년 이상 경과된 건수임

또한 현재의 사업 추진방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모계획에 의한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공모에 참여하는 시·군의 상황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의 범위 및 형식 등과 관계없이 정액 균등 보조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사업대상지의 규모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시·군 자부담 비율을 늘려 사업에 참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 맞게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목적하는 바의 일부 디자인을 진행단계에서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의 규모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목적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 디자인을 개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③ 만족도 조사의 구조적 한계

준공 실적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면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산보고에 활용하고, 그 다음해 예산 편성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단순히 사업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편리성, 쾌적성 향상이나 사고 예방 효과 등에 대한 등간척도 평가 항목, 그리고 잘된 점, 부족한 점과 같은 주관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존의 만족도 조사 방식은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조사에 집중되고, 조사의 표본수가 적으며, 설문 문항이 만족과 불만족의 상관관계에서 전체적인 사업 만족도만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 사업의 특성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평가속성을 추출하고, 평가속성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준공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같은 기준점을 설정해야 하므로 최소 1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조사, 분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유의미한 데이터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편향적인 답변이 유도될 수 밖에 없으며, 설문의 주체가 시·군청의 관계자인 관계로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계가 없는 민간기업의 사후 효과성 평가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④ 디자인 품질의 담보 미흡

앞서 제시한 추진 일정의 부족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 추진 일정을 줄이기 위한 담당자의 노력이 따르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에서 시범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결정하는 업체의 선정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통상 제안서를 통해 최적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발굴해야 하는데 디자인 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공정을 줄이기 위해 디자인 개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거나 제안서평가 없이 전자입찰로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디자인의 품질이 저하된다.

2019년 기준 3개 시범사업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업비 대비 디자인 개발 비용은 10개 사업 평균 12.5%이며,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50.0%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면 자격요건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전자입찰에 의한 견적입찰도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하는 경우와 디자인 개발 용역에 포함하여 일괄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40%를 차지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디자인 개발의 의도가 한층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

으나, 점진적으로 역량을 갖춘 공공디자인 전문회사가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계약 담당자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표 2-12] 시범사업 디자인 개발 입찰 결과(2019년 사업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디자인 개발비	계약방식			설계	
			수의	협상	전자	기본	실시
유니버설 디자인	광주시	44,000 (4.4%)	○			○	
	구리시	66,810 (13.4%)		○		○	
	성남시	50,000 (10.0%)	○			○	
	시흥시	85,000 (17.0%)		○		○	○
	포천시	49,300 (9.9%)		○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구리시	66,830 (13.4%)		○		○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비 포함	-	-	-	-	-
	남양주시	47,100 (9.4%)	○		○	○	○
	수원시	81,000 (16.2%)		○		○	○
	포천시	93,734 (18.7%)			○	○	○

2. 서울특별시 : 도시경관 개선사업

2.1 주요내용

서울시는 경관 취약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매력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관법과 서울시 경관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년간 사업으로 전년도 하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다음연도부터 1년간 설계기간을 거쳐 총 2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2년도의 경우 사업 대상지를 5개소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최대 15억 원의 사업비, 총 59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사업비 구성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6:4정도이며, 사업내용은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지역 녹화,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지역의 역사적 및 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등이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 및 전문가와 마을의 주요 경관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관사업 자문단의 자문을 설계 시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 [표 2-13]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사업(2021년 기준)

구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2년(1년 : 설계, 1년 : 공사 및 마무리)
사업비	최대 15억 원(시비+구비), 지역별 차등 지원, 총 사업비 59억 원(시비+구비)
개소	5개소
사업내용	-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 보차도포장, 골목길 및 계단 정비, 간판정비 등 - 지역 녹화 : 플랜트 설치, 수목식재, 심터 조성 등 -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 보안등 설치, CCTV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등 - 지역의 역사적 및 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획(주민설문 및 면담) → 설계용역(지역 활동가 참여, 주민설문 및 면담) →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 시설공사(주민참여 감독 참여) → 사후관리(주민평가위원 참여)

2022년도 사업 공모는 8개 자치구에서 11개 사업지가 신청하였고,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및 전문가 참여계획, 사업의 파급효과 및 연계협력 여부 등을 평가하여 5개 지역

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경관개선이 필요한 곳이며, 세부 사업 중 보호수 중심의 경관 보전, 해당 지역의 인적자원 활용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14] 서울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2022년도 선정지

구분	규모	사업내용
금천구 시흥행궁 역사문화 보존 경관사업	면적 44,857㎡	- 보호수(정조대왕 능행길에 들렀던 행궁의 터에 수령 830년 된 은행나무) 중심 경관 보전 - 보행 및 가로환경, 야간경관 개선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사업	연장 830m, 폭원 1~8m	- 북창동 먹자골목 간판정비 -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미관 저해요소 제거
종로구 지하문로 4길, 6길 경관개선사업	연장 350m, 폭원 2~5m	- 미술관 및 복합문화공간 밀집지역에 지역 미술관 큐레이터 및 설치 미술가 참여를 통해 가로 갤러리 조성 - 노후환경 개선 및 문화예술거리 조성
강동구 진향도로 경관개선사업	연장 460m	- 도심 속 가로숲 조성 - 녹지 및 심터 조성
도봉구 창동 골목시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연장 730m, 폭원 2~4m	- 시장 이용객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불법 지장물 제거 및 조명 설치

2.2 특징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사업 추진 초반에는 1년간 사업, 시비와 구비 매칭이 5:5였으나 최근에는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사업비 중 시비 매칭 비율 및 총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역시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업과 보안등 및 CCTV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등 범죄예방 개념을 적용하여 사업내용의 융합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경관의 개선뿐만 아니라 보호수 주변 보존 사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진체계 역시 사업과정 중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이 사업기획부터 설계 용역, 시설 감독, 사후관리에서의 평가까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⁸⁾

3.1 주요내용

인천시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군·구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대상지를 10개소 이상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가 사업 대상지 모집을 하면 기초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 담당부서에서 내부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충남이나 서울의 공모경쟁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담당자에 의하면 대상지가 많아지면서 관리가 어려워 공모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에는 총 47억 4천 7백만 원을 투입하며 점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지 평가를 위한 위원을 구성하여 선정하는 경쟁공모 방식이 아닌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시비, 군·구비가 5:5 매칭방식이며 사업유형은 3개로 구분된다.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3억 원~4억 원 규모로 1년간 사업이며 매년 7~8개소를 선정하고 있다. 한편,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은 인천시가 선발한 원도심 10대 명소에 해당하는 군·구가 사업을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비가 30억 원 내외이다. 인천을 상징하는 10개 색상의 인천색을 적용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적용, 또는 야간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인천을 상징하고 대표적인 자원에 대한 디자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021년도부터는 2020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매년 사업 대상수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 체감을 향상을 위해 2024년까지 약 30억 원을 투입해 안심거리 조성, 방법창 설치지원 등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의 경우, 경찰, 시민디자인단,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신청 대상지 실사 후 사업 승인을 해야 진행되는 방식으로 협의체가 대상지 선정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은 1년간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6개월 정도 사업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남과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관리는 선정된 대상지 사업 담당자가 매월 추진사항을 작성하는 월별 관리카드가 있어 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며, 현장점검과 사업완료 후 최종점검, 그리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다.

8)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및 기사, 인천광역시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 [표 2-15] 인천시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사업유형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 2014년부터 추진 -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 2014년부터 추진(원도심 10대 명소를 선발하여 매년 색채디자인, 야간경관 조명 사업 등 추진) -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 2020년부터 추진(2020년 : 2개소, 2021년도 4개소, 2022년도 6개소 선정)
사업비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 3억 원~4억 원 -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 30억 원 내외(사업규모마다 차등) -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 4억 원 - 매칭비율 : 시비(5) : 군·구비(5)
사업기간	-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 1년 -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 1년 - 원도심 디자인 명소화 사업 : 1년~2년
선정방식	- 매년 7월에 군·구가 사업계획서 제출 → 시 담당부서 내부심사 → 선정
선정기준	- 디자인 취지 부합성 평가
디자인관리	- 월별 관리카드 작성 : 사업 추진 군·구 담당자가 매월 추진사항 작성하여 시에 제출 - 중간점검 : 시 담당부서가 현장점검(추진 진행상황 점검) - 공공디자인 심의 : 실시설계 단계에서 심의 - 최종점검

3.2 특징

인천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모경쟁 방식이 아닌, 시에서 중점적으로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사업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중에 전문가가 자문하는 과정은 없으나, 월별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지원사업과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임에도 기간 안에 사업완료 가 어렵다는 것은 충남과 같은 상황으로 사업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주체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 대상지 승인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꼭 필요한 곳을 선정하고 주민의 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시사점 도출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공모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은 우선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과 같은 개념 정립은 물론 자원의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및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등 사업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경우 주민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군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사업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해관계주체인 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사업 선정 및 추진과정, 결과 모니터링 등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이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이라는 분야가 관 주도가 아닌 주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주체가 참여해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기간 및 사업비 편성 등 사업 추진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공통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년이라는 사업 추진기간의 비현실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을 교부 후 시·군에서 추경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비가 교부된 그 해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추진 일정의 촉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을 줄이는데 집중함으로써 업체 선정단계에서 디자인 품질을 검토하지 못하여 사업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이에 해당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비 편성의 불합리성을 문제로 들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공모에 참여하는 시·군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업의 규모 및 형식 등과 관계없이 정액 균등 보조방식을 택하고 있어 계획의 일부가 예산 문제로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 해당되며 충남 역시 동일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사후 평가체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사업의 전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으며, 사업완료 후 진행하는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및 사업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Ⅲ.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실태 및 추진 주체 의식 분석

1. 관련 조례 및 예산현황

1.1 관련 조례

현재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경관협정 시범사업,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의 4가지 유형이다.

2021년 7월에 개정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조례」에서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디자인 아카데미사업 외에도 아직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용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충청남도 경관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20년과 2021년 2년간 추진한 후 2022년 일몰되었다.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한 후 역시 2022년 일몰되었다. 도 담당자에 따르면 경관협정 시범사업과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충남도 사업 예산감축 이유로 일몰되었다고 한다. 이에, 추후 사업의 필요성 재고에 따른 재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2009년 충남에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그리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2016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1] 충남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조례 및 경관 조례 상 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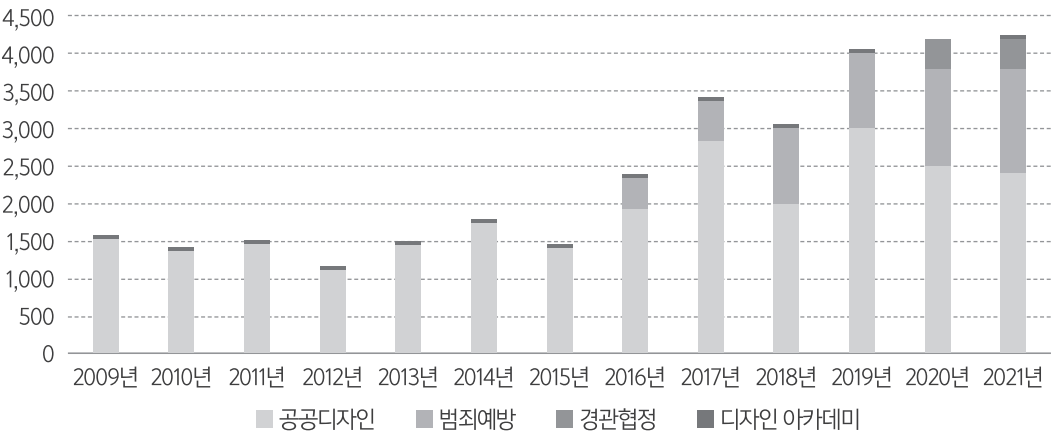
구분	근거 조례
공공 디자인 공모사업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조례에 규정(제9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 도지사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조례에 규정(제21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 도지사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디자인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시범·공모사업 추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범용 디자인 사업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조례에 규정(제17조 범용디자인 사업) - 도지사는 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경관협정 시범사업	- 충청남도 경관 조례(제13조 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제15조 경관사업의 시행) - 도지사는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도지사는 지역경관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한 경관발굴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으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디자인 아카데미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 조례에 규정(제37조 관계기관의 협력 등) - 도지사가 대학, 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과 교육,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

1.2 예산현황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만 추진했었던 당시 약 15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9년부터는 약 40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디자인 공모사업비가 점차 확대되기도 했지만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관협정 시범사업 등 사업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업예산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2] 충남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연차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536	1,370	1,470	1,110	1,455	1,746	1,420	1,935	2,830	2,000	3,000	2,500	2,400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400	545	1,000	1,000	1,300	1,400
경관협정 시범사업												380	380
디자인 아카데미	38	35	35	35	35	35	40	40	35	60	60	-	55
총사업비	1,536	1,370	1,500	1,140	1,485	1,776	1,450	2,365	3,410	3,060	4,060	4,240	4,235



[그림 3-1] 충남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예산 현황

2. 사업 추진현황

2.1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1) 사업 개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200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총 62개소가 선정, 진행되었다. 사업내용은 주로 쉼터, 조형물, 안내판, 펜스, 간판 등 공공공간 및 시설물 등의 설치, 개선으로 마을의 경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H/W중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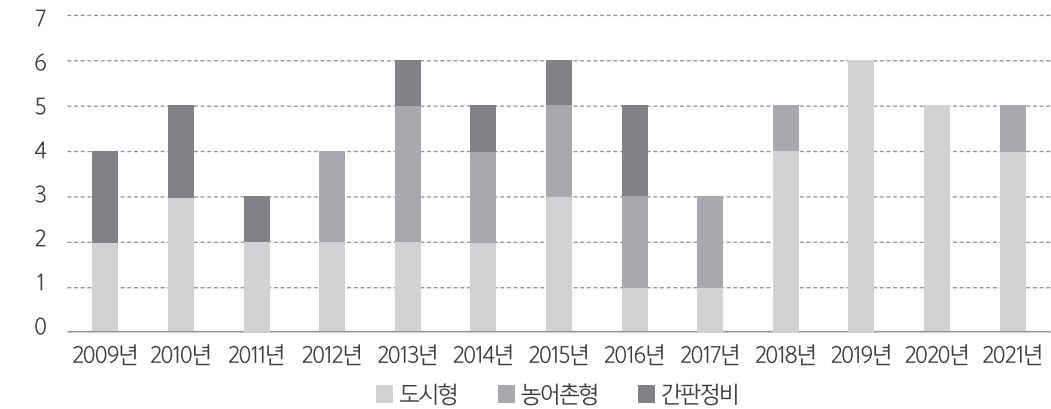
사업추진 초반에는 간판정비 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신청하는 시·군에서 자유롭게 사업내용을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점차 도시형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공주, 당진, 홍성, 아산에서는 도시형을, 서산에서는 농촌형을, 보령, 서천에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형과 농촌형 모두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주를 비롯하여 논산, 당진, 보령, 홍성, 아산, 서산, 금산에서는 그동안 사업 참여율이 높은 반면, 청양은 사업 참여가 전무하고 계룡, 부여, 태안 역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시·군간 사업 참여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참여율이 높은 공주, 논산, 홍성, 아산, 서산, 금산(2020년까지)의 경우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 곳으로 디자인 전문직 유무에 따른 사업 참여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4, 5곳의 시·군에서 4억 원~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1년간 단기사업으로, 사업비는 그동안 도와 시·군의 매칭비율 5:5였으나, 2022년도 선정 사업은 3:7로 도 사업비 지원 비율이 낮아졌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있기는 하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 2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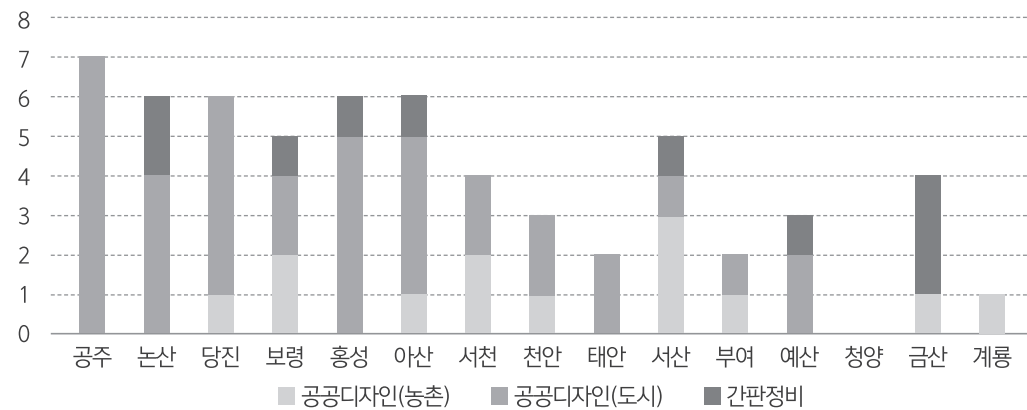
대상지 선정방식은 해당 시·군 사업 담당자가 공모요강에 따라 공모신청을 하면 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심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사업기간은 2020년도 사업부터는 전년도 하반기에 공모하여 시공발주를 당해년도에 하도록 하여 공모부터 준공까지는 대략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디자인관리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도 선정 사업부터는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⁹⁾를 운영하여 심의 전과 후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다.

9)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1인, 센터 자문위원회 전문가 1인, 센터 연구원 1인 총 3인)를 구성하여 사업 선정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 계획단계에서 디자인 방향의 적정성, 심의 후 조치사항 반영, 준공 후 모니터링 등 단계별 자문을 진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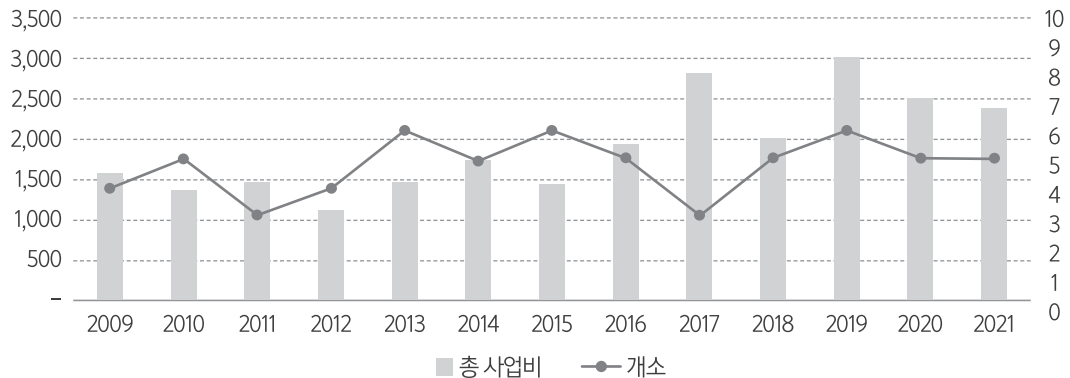
자료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내부자료 토대로 작성

[그림 3-2]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유형



자료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내부자료 토대로 작성

[그림 3-3] 충남 시·군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현황



자료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내부자료 토대로 작성

[그림 3-4]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수와 총사업비

2) 사업 사례

① A지자체 경관 및 보행로 개선사업

A지자체에서 추진한 경관 및 보행로 개선사업이며 지역의 인적자원 홍보 및 이를 테마로 하여 특색있고 깨끗한 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골목길 및 전시관 주변 개선, 쉼터 조성 등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오래되고 좁은 경사로 된 골목길로 노후되고 눈길 미끄러짐 및 안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거주민과 방문객이 골목길 안쪽까지 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내사인 설치 및 스토리텔링, 담장 및 벽체 도색 등 디자인 개선과 더불어, 경사로 인해 보행 시 미끄러짐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성 측면에서의 사업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불법 쓰레기 투기로 지저분했던 공간을 주민이 화단을 가꾸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을 활용한 지역 홍보 디자인



주민주체 화단가꾸기



인적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노후된 골목길 디자인 및 안전성 개선

[그림 3-5] A지자체 사업 추진 결과

한편, 골목길 안쪽이 경사로로 되어 있어 눈길 및 빗길 미끄러짐 예방, 그리고 거주민의 대부분이 노약자임을 고려하여 안전한 보행을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난간이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지도록 설치하여 효과를 저감시키고 있으며 잡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겨울철에 잡기 힘들게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좁은 골목길에 반사경, 조명 등이 부족하여 야간 보행 시 범죄두려움에 취약한 문제 또한 개선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사업이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편의 및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범죄예방디자인 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 사업에 의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S/W사업 병행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전환의 필요성 역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난간의 연속성 부재 및 소재의 부적절,
골목 곡각부분 안전성 대책 부재

쓰레기 불법 투기

[그림 3-6] A지자체 사업 추진 후 문제점

② B지자체 간판정비사업¹⁰⁾

B지자체에서 추진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 이전부터 국비, 도비, 군비, 주민 자부담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2014년에 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계사업으로 추진된 사례이다. 사업계획서 자료에 의하면 주민 자부담 포함 약 3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이 중 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5억 원의 사업비¹¹⁾가 포함되어 있다. 대상지는 중심가로 1.4km에 해당되는 구간이며 사업내용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역 경관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한 간판디자인 설치이다.

사업추진 전 현황은 불법광고물 설치는 물론, 건축물 및 가로경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난잡하고 조잡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적용된 색채 및 크기 역시 주목성 또는 시인성을 고려하지 않아 광고물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간판이 즐비해 있었다.



무분별한 광고물
(배려없는 설치로 주변환경과 부조화)



개방감 없는 건축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



주변환경과 부조화
(지역적 특성과 맞지 않는 거리)



정체성이 결여된 환경
(주변환경과 조화를 무시한 지역 정체성)

자료 : 2014년 OO읍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계획서, 2014

[그림 3-7] B지자체 사업 추진 전 현황

10) 박혜은 외(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보고서 내용 중 수정 보완

11) 도비 7천만 원, 군비 약 3억 8천만 원, 자부담 4천 5백만 원

사업 완료 후 현재 가로경관 현황은 간판의 크기 및 형태에서 통일성을 가진 디자인으로 정비되어 기존보다 정돈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대형 판류형 간판대신 LED간판으로 교체하고, 간판 수량 또한 규제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조잡한 이미지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유리창 부착 광고물 및 건축물 외벽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행위, 그리고 보행로에 상품 진열로 인한 보행에 불편과 안전성 우려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이것은 관 주도의 사업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써, 점포주의식에 따른 행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민 스스로가 경관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식을 가질할 수 있도록 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주민교육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볼 수 있다.





[그림 3-8] B지자체 사업 추진 결과

③ C지자체 경관개선사업¹²⁾

C지자체에서 추진한 경관개선사업으로서 마을의 자연,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여 타 마을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도모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커뮤니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자 방향이다.

사업추진 전 현황은 마을 안길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시설물이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균열되어 무너질 위험이 있는 담장과 보안시설 미비 등은 보행의 안전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과도한 색채와 크기의 관광지 표지판 역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타 공공시설물과의 조화성도 결여되어 있어 디자인의 통일성과 조화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마을 일대를 대상으로 마을 안 담장개선 및 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통한 마을의 쾌적성과 안전성 향상, 마을의 역사 문화자원의 입구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 부여 및 방문객 유도 등을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림 3-9] C지자체 사업 추진 전 현황

12) 박혜은 외(2018),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 보고서 내용 중 수정 보완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사업기간과 4억 원이라는 사업비의 한계로 인해 주민교육이 아닌 주민 설명회의 소극적인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한 탓에 주민참여 커뮤니티 디자인 방식을 적용하지 못했다. 마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 및 소화전 설치, 골목길 고보조명, 마을의 미관 향상을 위해 담장도색 및 울타리 정비, 마을 입구 및 역사문화자원 상징성 부여를 위해 마을 종합 안내도와 간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마을 안길이 밝아지고 깨끗해졌으며 주민 및 방문객이 마을의 자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긴 했으나,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정비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쓰레기 방치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이는 주민의 의식전환 및 역량향상에 따른 주민들 간 약속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주민교육과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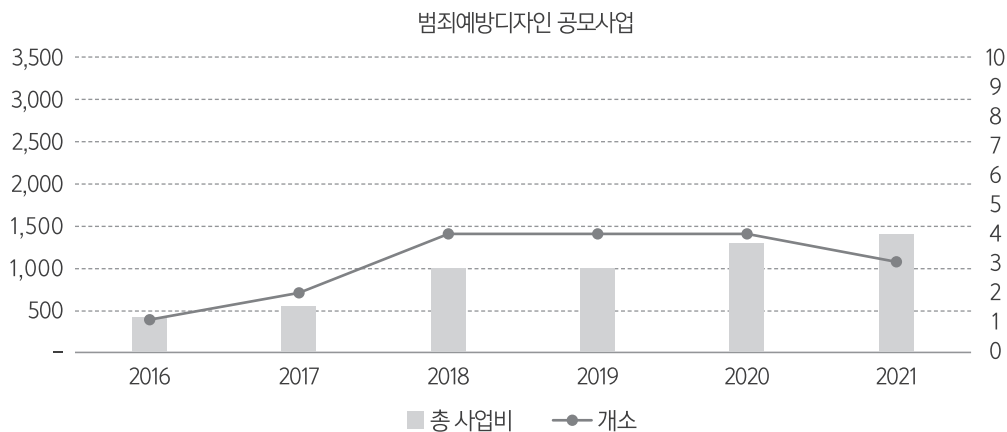
[그림 3-10] C지자체 사업 추진 결과

2.2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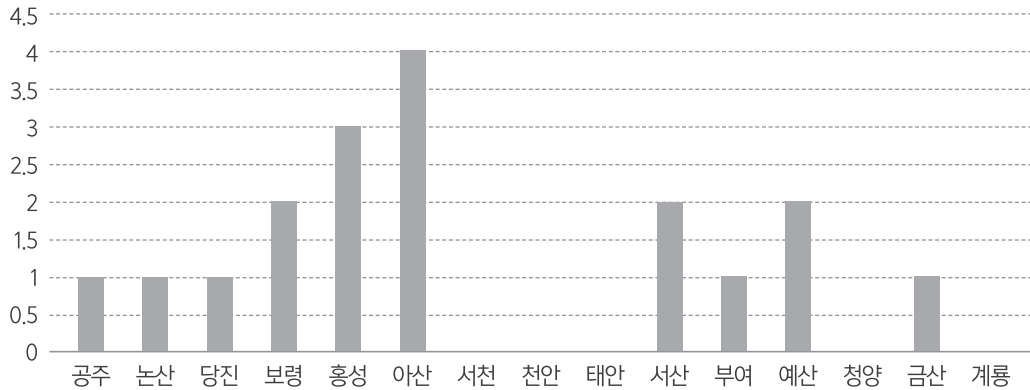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은 2016년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이후 점차 선정 수를 확대하여 최근에는 4개소 정도를 선정, 2021년 기준 총 18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 5:5 비율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4억 원~5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여 추진하고 있다. 사업 선정수의 증가, 사업비 증액에 의해 총 사업비 역시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약 15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시·군의 관심과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시·군 중에서 아산이 4개소로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홍성, 그리고 보령, 서산, 예산에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천, 천안, 태안, 청양, 계룡에서는 6년간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몇몇 시·군에 편중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참여도가 높은 시·군 중 아산시의 경우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고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 확률을 높이고 있다. 예산군의 경우 역시 지속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료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내부자료 토대로 작성

[그림 3-11] 충남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수와 총사업비



자료 :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내부자료 토대로 작성

[그림 3-12] 충남 시·군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현황

2) 사업 사례

① D지자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사례

사업 대상지는 주택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곳이다. 낙후된 담장과 어둡고 좁은 골목, 방치된 폐가 등이 범죄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을입구 담장 개선, 등하교길 계단 정비, 학교 담장 및 출입문 개선, 조명 및 CCTV 설치 등을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추진 결과, 등하교 시 많은 이용이 있는 고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투시형 펜스 설치 및 조경 식재, CCTV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보행 시 개방감을 부여하면서 범죄두려움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산책로 및 등하교 시 많은 이용이 있는 계단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하고 태양광 조명 설치로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마을 안길에도 CCTV와 조명, 안심벨 일체형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장조사 시 주민 인터뷰 조사에서도 사업 후 마을이 깨끗해지고 밝아진 것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아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장조사 결과, 폐가가 방치되어 있거나 사업에 의해 설치된 태양광 벽부등이 미작동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방치된 폐가 주변은 추후 도로 신설로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주민의 범죄두려움 저감과 거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도로 신설 전까지 저비용으로 폐가 주변을 차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업의 이해와 인식향상에 의한 주민들의 유지관리 방안이 미흡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한정된 사업비와 정해진 사업기간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13] D지자체 사업 추진 전과 후 현황



방치된 폐가

미작동 시설물 방치

[그림 3-14] D지자체 사업 추진 후 문제점

② E지자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사례¹³⁾

사업 대상지는 약 7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전통시장에 근접해 있지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막다른 좁은 골목길이 많으며 이러한 골목길 안쪽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또한 마을안길은 경사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3) 박혜은 외(2019),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연구보고서 내용 중 수정 보완



[그림 3-15] E지자체 사업 대상지

전통시장에 근접해 있는 주택가로서 노후된 주택이 많은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로에 접해 있는 주택의 벽면을 깨끗하게 도색하여 밝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이 추진되었다. 마을안에 주민들이 모여서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하였으며, 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벽화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골목길을 밝게 하여 어둡고 삭막한 골목길을 밝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골목길 안쪽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스토리텔링 벽화와 조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안쪽은 여전히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적용하고 있는 조명이 오히려 야간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마을안 경사로 끝이면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삼거리에는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로고젝터를 활용하여 방범구역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여전히 어둡고 골목길은 더욱 어두워 야간 보행 시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CCTV와 비상벨 설치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여 대상지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저감시키고 위급 시 이용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노후주택 경관향상을 위해 도색



골목길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마을명칭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마을안 주민들 휴식 및 커뮤니티를 위해 쉼터 조성



마을 방범을 위해 CCTV 설치

위급 시 이용하도록 CCTV에 비상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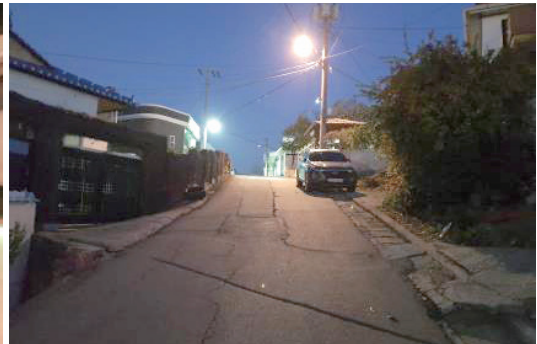
어두운 골목길 밝게 하기 위해 벽면에 조명 설치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방범구역 인지성 강화

[그림 3-16] E지자체 사업 결과



벽면 스토리텔링 및 조명이 어린이집까지
연결되지 않아 어두움



조명은 있지만 야간에는 어둡고
CCTV 설치 안내판 인지성이 떨어짐



화려한 색 조명이 오히려 야간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그림 3-17] E지자체 사업 추진 후 문제점

2.3 경관협정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2020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15개 시·군 중 매년 1곳을 선정하여 도비와 시·군비 각 1억 9천만 원의 총 3억 8천만 원을 지원하는 2년간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관에서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형태임을 감안하여, 경관협정 유도부터 기획,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S/W사업,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면서 경관협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경관사업의 시공비 지원이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공모사업과 다른 점은 2년간 사업이라는 것과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S/W사업) 운영, 경관협정 체결을 통한 H/W사업의 S/W와 H/W사업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즉, 1차년도에는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주민교육을 추진하고, 2차년도에는 주민교육을 토대로 체결한 경관협정 내용에 따라 H/W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2020년에 홍성, 2021년에는 공주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민교육 일정이 늦춰지면서 홍성의 경우 2020년 8월에 선정되었지만 2021년 6월에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H/W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 [표 3-3] 충남 경관협정 시범사업 내용 및 방향

기간	단계	내용
1차년도	협정 유도/기획/체결	- S/W사업, 주민 활동(소규모 경관활동 등)
		- 경관협정서 작성
2차년도	기획/유지관리	- 2차년도 H/W(경관개선)사업 구상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 경관협정 체결 인가/심의
		- H/W(경관개선)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
		- 충남도 공공디자인심의
		- H/W(경관개선)사업 시공

2) 사업 사례 : 홍성군 고미당마을

홍성 고미당마을은 경관협정 체결을 위해 주민설명회 2회, 주민교육을 9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관협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토대로 협정 체결 유도,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활동 또는 관리 기획 등 경관협정 체결 준비와 과정이 설명회와 교육을 통해 진행되었다.

▼ [표 3-4] 충남 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 및 협정 체결 행정절차

주차	월/주	행정절차	경관협정 주민참여 교육	교육 수행기관 별도 진행
1	11/19		- 주민설명회 - 용역소개 - 추진일정 및 교육 안내	마을 현황 분석
2	12/4	경관협정준비위원회 구성	- 경관협정 소개 - 우리마을 정원이야기 - 정원에 대한 생각, 좋아하는 식물	
3	3/3		- 정원이야기 결과물 공유 및 추가 의견 수렴 - 사업 우선순위 설정	- 마을 경관 마스터플랜 작성 - 경관협정서 초안 작성
4	3/10		- 마을경관산책 - 마을 경관 문제점 도출, 해결방안 모색 - 사업 우선순위 설정	
	3/10	디자인관리 자문단 1차 자문		
5	3/17		- 정원 실습 1 - 화분에 식재하기	
6	3/24		- 정원 실습 2 - 유휴부지 정원조성	- 경관협정서 초안 작성 - H/W사업계획서 작성
7	3/31		- 경관협정서 초안 설명 - 사업내용 보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및 실측
8	4/7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을 위한 경관관리단 구성	- 경관협정서, 경관가이드라인 설명 - 사업 의견수렴 - 행정절차 설명	
	4/8	디자인관리 자문단 2차 자문		
9	4/14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동의 - 경관협정 체결자 동의 - 경관협정서 결정	- 경관협정서 설명 - 사업내용 및 대상지 확정 - 협정체결자 모집	- 우리마을 정원계획 - 장소, 식재수종 선정 및 제시
10	4/21		- 경관협정서 설명 - 협정체결자/운영회 설립 동의서 징수	
11	5/4	-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준비 - 경관위원회 심의 준비	최종 경관협정서 설명	경관심의 자료 작성

* 출처 : 박혜은 외(2021),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

교육방법은 이론, 브레인스토밍, 체험, 워크숍, 실습, 설명회 등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마을 경관문제 및 개선방안 도출 단계와 경관협정서 작성단계에서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마스터플랜 도출과정에서 주민들 간 논의와 토론과정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경관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는 것, 행정-전문가-주민의 다양한 주체에 의한 경관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 무엇보다 주민이 경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관이 주민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는 성과가 있었다.



마을 경관 장단점 도출(브레인스토밍)



마을 경관문제 공유(브레인스토밍)



정원실습(화분 식재)



정원실습(유휴부지 정원조성)



전문가와 함께 마을 산책



전문가 의견 제시(디자인관리 자문단)

[그림 3-18] 충남 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과정

경관협정 체결은 시작할 당시의 의지와는 달리 추진과정에서 협정 체결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고미당마을의 경우 교육에 참여한 주민 외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도 참여하는 등 높은 참여율 속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했다.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교육방법과 내용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나, 이번 사업을 통해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향상되고 경관이 매개가 되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본 사업의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1차년도에는 경관협정서 작성 및 경관협정 체결, 2차년도에는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H/W 사업 추진의 2년간 사업으로 주민의식 향상과 함께 경관개선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앞서 한계로 제시했던 주민참여 미흡에 따른 사후관리의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및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사업기간을 확대하여 주민의식 향상을 위한 S/W 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경관협정 체결 지원 교육을 통해 주민들은 고미당마을의 경관보존 및 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관협정을 체결하였다. 경관협정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관보존과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지켜야 할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3-5] 충남 홍성군 고미당마을 경관협정 항목

공공부문	민간부문
- 마을정원 관리	- 담장 및 지붕의 디자인, 관리
- 공동작업장 관리	- 개인창고 디자인 및 관리
- 마을안길 화단관리	- 폐가 철거 및 활용
- 공용주차장 관리	- 개인사유물 정리 및 관리
- 버스정류장 조성 및 관리	

2.4 디자인 아카데미사업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을 위해 주민, 공무원, 건축사, 충남도내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탐사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 공무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남도내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답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며,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디자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당해년도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의 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주민, 공무원, 대학생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의식 향상과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 S/W중심의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은 동일한 대상에게 정기적 및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디자인 아카데미 대상지 선정 수, 추진단계, 사업내용 등의 측면에서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 횟수, 의식향상과 더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포함 여부, 타 공모사업과의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 [표 3-6] 충남 디자인 아카데미사업(2020년 기준)

구분	주요내용
운영기간	9개월
운영내용	공공디자인 교육(10회 이상), 도시디자인탐사단 활동 등
사업비	도비 55백만원(민간위탁금)
운영방식	현장견학, 집합교육
대상	- 2021년 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지역 주민, 공무원 - 공무원, 일반도민, 건축사 및 도내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등
내용	- 도민, 공무원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순회 교육 실시 - 공공디자인에 대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현장 견학 등 실시 - 도시디자인 탐사단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사업 발굴 및 개선방안 탐구

3.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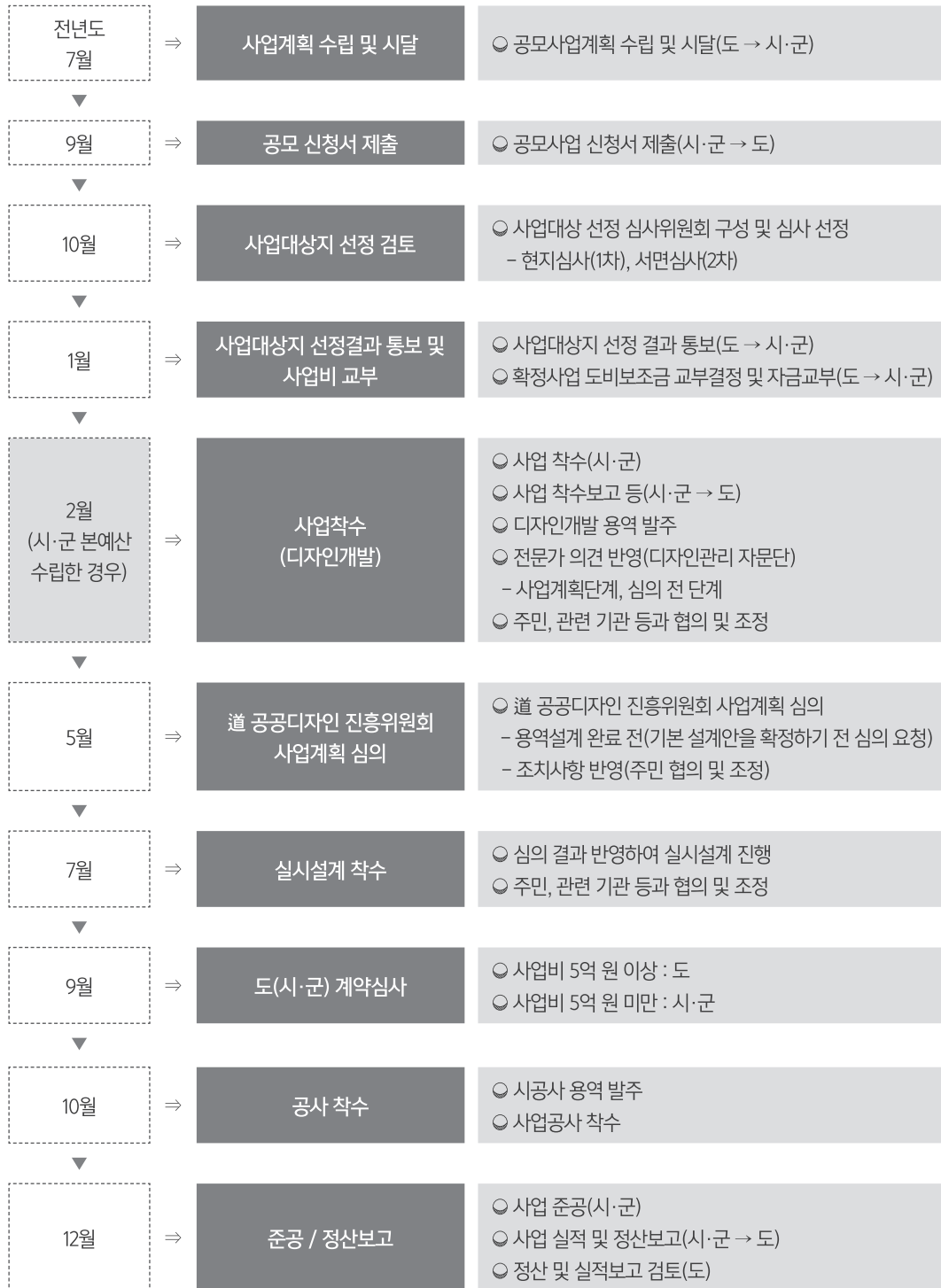
3.1 사업 추진절차

공모사업 중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동시에 진행되며 추진 일정도 동일하다. 이들 사업은 1년 단기사업이지만 절차가 많아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공모와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2020년부터 추진일정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확정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사업 추진 당해연도 1월 시·군에 교부되며, 사업에 선정되어 전년도 하반기에 본예산을 수립한 시·군의 경우 당해연도 2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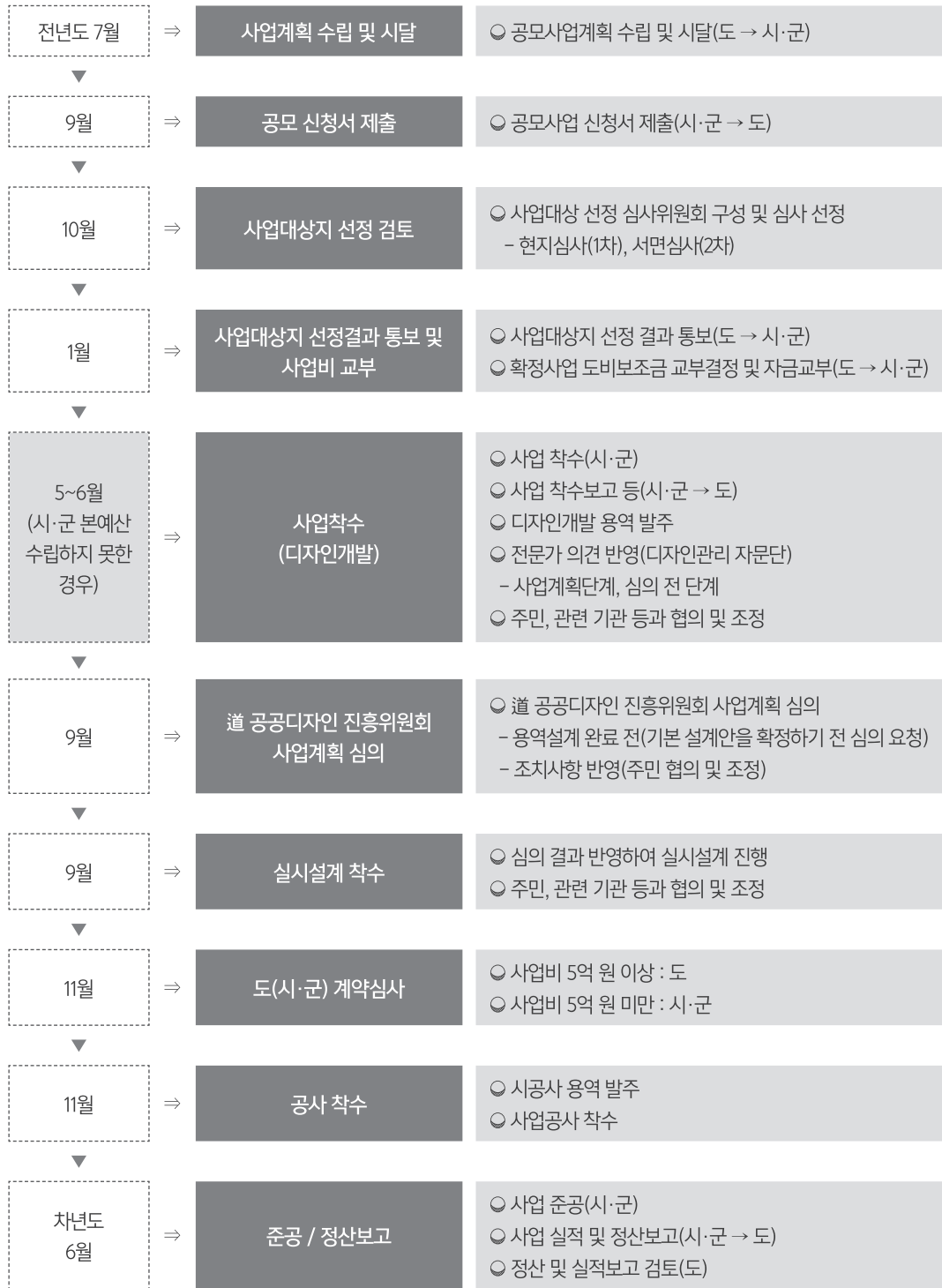
충남에서는 공모사업의 경우 디자인관리 자문단에 의한 전문가 자문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디자인관리 자문단에 의한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주민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경 디자인개발 완료 전 단계에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절차를 받게 된다. 7월경에는 주민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실시설계 완료 전 단계에서 도(시·군) 계약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에 공사를 시작하고 12월에 사업 준공과 정산 및 보고하는 일정이다.

이는 공모사업 추진계획상 일정이며 순조롭게 진행되어 10월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1월 말부터 동절기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3개월 간 공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주민 또는 관계 기관(경찰서, 학교 등)과의 사업내용 협의 및 조율 과정 등으로 실시설계나 공사단계에서 예상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내용 수정과 이에 따른 주민 또는 관계 기관과의 조율과정이 추가되므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절차에서만 보더라도 추진계획상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시·군 예산 여건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시·군의 경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군마다 의회 일정 및 필요시기 등에 따라 추경 예산확보 가능 시기가 상이하므로 이 경우, 사업착수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당해연도 5~6월 경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현재 추진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1년이라는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문제로 제시했던 상황과 동일하며 충남에서 역시 1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명시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1년 사업으로 진행하기보다, 실제 사업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기간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주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기간 변경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19] 공모사업 추진 일정(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그림 3-20] 실제 공모사업 추진 일정(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한편,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2년간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주민교육과 경관협정 체결 진행, 2차년도에는 경관협정 체결에 따른 H/W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를 진행하는 절차이다.

2020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일정대로라면 2020년에 선정된 사업이 2020년 말경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에 H/W사업 준공까지 완료했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모임이 금지되는 시기가 많아 2022년 중순에 마무리로 약 6개월 정도 늦춰졌다.

각 절차별 소요되는 기간으로는 사업선정 후 경관협정 체결 지원을 위한 주민교육이 약 5개월, 시·군 경관심의 진행 및 조치사항 반영에 약 2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약 6개월의 총 1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외에도 용역 발주기간(주민교육 운영 용역, H/W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디자인관리 자문단 진행, H/W사업에 대한 충청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포함되어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총 19개월 정도로 사업에 투입되는 기간은 약 1년 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이 교부되는 것이 6월 말이고, 시·군에서는 추경 또는 하반기 예산에서 사업비를 수립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시·군의 예산 여건에 따라 사업 착수 시기가 달라지게 된다. 즉, 7월에 추경 예산이 확보 가능한 시·군에서는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시·군에서는 역시 명시 이월하여 다음연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즉, 경관협정 시범사업 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및 범죄예방디자인 사업과 같이 공모 선정을 앞당겨 사업기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2년 반 사업기간으로 변경하여 사업 담당자가 사업의 성과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1] 공모사업 추진 일정(경관협정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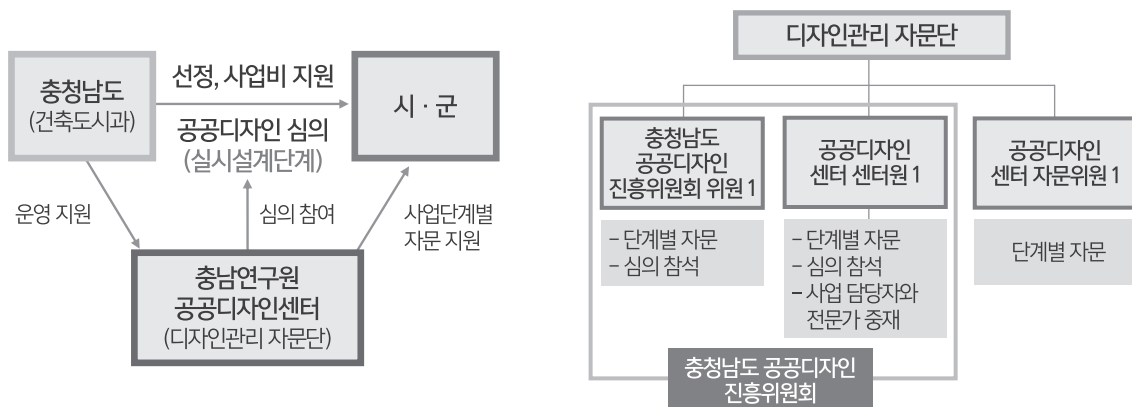
3.2 디자인관리 자문단 운영

2021년부터는 공모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사업단계별로 자문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관리 자문단은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2명(공공디자인센터 센터원 1명 포함)과 공공디자인센터의 자문위원 1명의 3명으로 구성되어 자문 지원을 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경관협정 등 사업유형에 따른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건축, 조경,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복수로 구성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고, 자문내용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한 심의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심의위원이 디자인관리 자문단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도면 중심으로 검토하여 대상지 현황 및 주민의견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심의의 기능을 보완하여 대상지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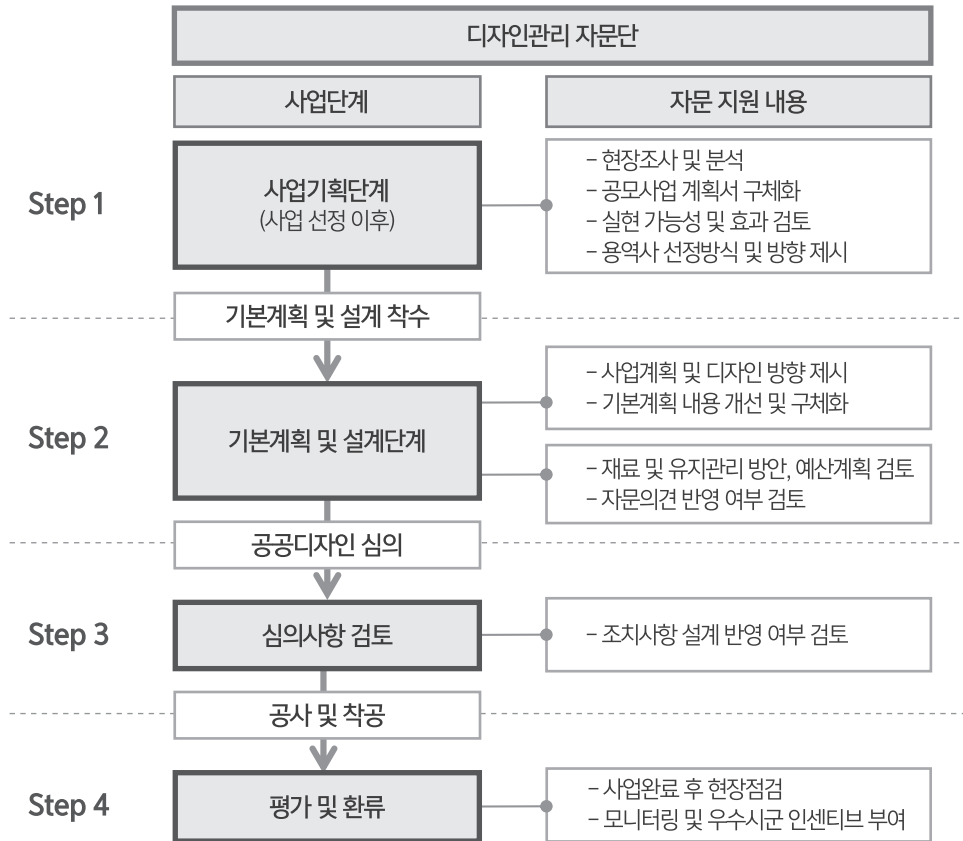
3명으로 구성된 디자인관리 자문단 중 공공디자인센터 센터원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이면서 전문가로서 자문, 사업담당자와 전문가 간의 중재역할, 그리고 사업단계별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지원 단계 및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디자인관리 자문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심의 시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 대상지 특성에 맞도록 심의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센터 자문위원은 사업단계별 사업내용에 맞는 자문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디자인관리 자문단 구성은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담당하지만 자문 신청은 사업수행 주체인 시·군에서 하도록 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 시·군 담당자의 의지와 필요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22] 충남 디자인관리 자문단 역할 및 구성

디자인관리 자문단은 1개 사업당 3회~4회 단계별로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사업에 선정되고 난 이후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효과를 검토, 사업내용에 맞는 용역사 선정방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방향의 적합성과 재료,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자문의견을 반영 후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 공사 및 착공 후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사업단계에 맞는 자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림 3-23] 충남 디자인관리 자문단 지원 단계 및 내용

하지만 1년간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운영해본 결과, 1개 사업당 자문을 지원한 횟수는 최대 2회이며 대부분 1회에 그치며 시·군에서 디자인관리 자문단 지원에 대한 호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였지만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결과를 받아 사업내용을 상당부분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디자인관리 자문단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행정 및 디자인관리 자문단 의식 분석

4.1 조사개요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길게는 12년째, 짧게는 2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충남의 15개 시·군에서는 사업공고를 내기 전부터 사업공모 의향이 있을 시 준비하는 등 충남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으로서 정착했다 할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사업의 효과 향상을 위해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사업추진에 행정뿐만 전문가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충남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 추진한지 10년 이상 된 현 시점에 시의적절하며, 관련 주체의 의식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5개 시·군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대상으로 자문회의 겸 인터뷰조사를 진행하였다.

행정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시·군의 경관/디자인 관련 부서 사업 담당자이며, 이 중 디자인 전문직 8명, 시설 건축직 및 일반 행정직 6명의 총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식은 디자인 전문직과 시설 건축/일반 행정으로 구분하여 심층 인터뷰를 위해 FGI방식의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 항목을 사전에 설명하고 각 항목에 대한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며, 인원예 따라 회당 3시간~4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전문가 대상 인터뷰조사 및 자문회의는 디자인관리 자문단으로 참여하면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3명 중 2명은 비대면 방식으로, 1명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현재 공모사업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과 조사항목 설명을 유선으로 하고 자료를 송부한 후 조사 및 회의, 서면자문을 진행하였다.

조사항목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토대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크게 사업선정방식, 사업추진과정, 운영관리로 구분하여 세부항목을 구성하였다. 행정에게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사업선정방식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추진체계와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등 공모사업에 대한 현재 문제점부터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대상 인터뷰조사 및 자문회의에서는 행정 대상 인터뷰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과 개선방안, 사업의 성과와 효과 향상을 위한 내용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 [표 3-7] 조사대상 및 개요

구분	개요
행정	디자인 전문직 - 일시 : 2021. 11. 24.(14:00 ~ 18:00) - 장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 대상 : 8명(공주(1), 천안(2), 홍성(1), 아산(1), 논산(2), 서산(1))
	시설 건축직/일반 행정직 - 일시 : 2021. 11. 29.(14:00 ~ 17:00) - 장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 대상 : 3명(보령(1), 예산(1), 아산(1))
	- 일시 : 2021. 12. 1.(14:00 ~ 17:00) - 장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 대상 : 3명(계룡(1), 금산(1), 태안(1))
전문가	비대면 회의 - 일시 : 2021. 12. 23.(10:00 ~ 12:00) - 장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 대상 : 디자인관리 자문단(이선주 에이지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종세 건양대학교 교수)
	서면 - 일시 : 2021. 12. 24. - 장소 : 서면 - 대상 : 디자인관리 자문단(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행정 대상 FGI조사(2021. 11. 29.)



행정 대상 FGI조사(2021. 12. 1.)

[그림 3-24] 행정 대상 FGI조사



[그림 3-25]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절차

▼ [표 3-8] 조사대상별 조사내용

구분	항목	조사대상		
		행정	디자인관리 자문단	
사업 선정 방식 (6)	대상지 선정	1. 공모경쟁 방식으로 유지할 필요성, 지역역량이 부족한 곳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	○	
		2. 현재 선정 기준의 적정성	○	
	공모기간	3. 기간의 적정성(준비 및 주민의견 수렴에 충분한지)	○	
	사업기간	4. 기간의 적정성(협의체 구축 및 운영하기 충분한지)	○	
		5. 예산의 적정성	○	
	사업예산	6.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른 예산의 차등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	○
사업 추진 과정 (7)		1.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정기적 및 지속적 자문의 필요성	○	○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 및 방법, 효과에 대한 의견	○	○
	추진체계	3. 중장기 사업(공모사업) 추진한다면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및 규 모 변경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	○	
		4.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_지자체_디자인관리 자문단_주민 간 의사소통 체계 구축의 필요성	○	
		5.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경관협정 등 사업내용의 융합 및 연계 추 진에 대한 의견	○	○
	사업내용	6. H/W중심의 사업에서 S/W중심의 프로그램 병행 필요성	○	
		7.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모사업의 필요성	○	○
운영 관리 (4)	사후지원	1.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연차사업 추가 지원 필요성	○	
	운영주체	2. 사업운영을 위한 협의체 작동 및 마을 활동가 육성의 필요성	○	
	유지관리 방안	3.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사후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	○	
		4.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	

4.2 사업 선정방식

1) 대상지 선정

현재 공모사업은 도가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문서를 시달하면 사업공모를 희망하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도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심사와 서류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지를 선정한다. 즉, 공모경쟁 방식이며 지역역량이 갖춰져 있으면서 사업 아이템이 좋은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군 담당자들은 공모경쟁 방식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나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액사업의 형태로 간단한 방식의 절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지역역량은 부족하지만 공모경쟁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소액으로 지원해줄 경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담당자도 있었다. 하지만 소액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지자체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공모신청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디자인 전문직이 아닌 경우 공모신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별도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타 부서와 협업이 가능한지 여부, 디자인 개선의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시·군에서는 현재 공모신청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 안배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이 필요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공모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시·군에서 공모 신청지를 선정할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공모기간 및 사업기간

현재 공모사업은 매년 정해진 일정에 의해 공모 접수가 되므로 준비기간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절차를 유지한다면 1년은 매우 짧고 2년으로 확대,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들 간 합의형성이 필요하므로 3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사업예산

우선 도와 시·군비 매칭비율에 있어서 경관협정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2021년까지는 도와 시·군비 매칭은 7:3이었다. 하지만 2022년도 사업부터는 3:7로 변경되어 시·군의 부담이 커져, 이에 대한 개선의향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사업비는 개소당 4억 원~5억 원 정도인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사업비가 적으며, 사업내용이나 범위 역시 사업비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 효과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대하여 담당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디자인 전문직이 없고 사업 경험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의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과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사업예산의 차등 지원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며 소규모 사업일수록 사업 담당자들의 관심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현재 도비가 투입되는 소규모 사업 모두가 도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이나, 소규모의 경우 심의 대신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일정 수준의 절차로 대신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사업 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4.3 사업 추진과정

1) 추진체계

2021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업 담당자들은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현장중심 자문이 가능하며 현장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심의에 대한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짧아 사업 완료하는데 급급하여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심의와의 상호보완 부족, 디자인관리 자문단 구성이 사업내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디자인관리 자문단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디자인관리 자문단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도 심의에서 사업내용이나 방향이 많이 바뀌거나 재심의 결과를 받게 되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디자인관리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도 유사하다. 디자인관리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담당자들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과 권한으로, 우선 디자인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시·군에 더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심의 전 단계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와 사업 완료 후에도 자문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정립, 그리고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부

터 심의까지 참여하도록 하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사업기간으로는 사업의 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이 형식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기간을 늘리고, 공모사업 추진단계부터 완료 후까지 지원하도록 명확한 역할 부여와 심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스템 및 사업규모에 따라 심의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심의에 대해서는 현재 도비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일정 횟수 이상 자문 진행으로 대체하는 등 유연한 행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사업기간에 대한 사업 담당자들의 개선 의향이 높은 가운데, 사업유형을 2년간 단기사업과 3년 간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이었으며, 중장기 사업의 경우 사업 성과를 위해 중간평가 도입 시스템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이었다. 전문가들도 사업기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3년 간 중장기 사업의 경우 중간점검과 연차별 사업내용을 제시해줌으로써 마지막 연차가 되어 뒤늦게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사업 효과 저하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공모사업 내용이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주므로 주민과의 의견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디자인관리 자문단, 도 담당부서, 지자체, 주민 간 의사소통 체계 구축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2) 사업내용

현재 공모사업은 디자인 아카데미를 제외하고 1년간 사업과 2년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큰 틀에서는 사업내용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업 간 융합 및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사업기간에 따라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견이었다. 즉, 사업기간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사업내용 간 융합 및 연계는 어려우며,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차등 지원 된다면 중/대규모 사업에서는 융합 및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사업과 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 담당자들은 가장 중요하며 타 부서와 협업, 사업 간 융합 및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기획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마스터플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스터플랜의 성격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과 시범적용을 통해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들 중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범죄 예방디자인 사업의 경우, H/W중심의 사업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S/W사업과의 병행 의향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필요하다면 지자체 내에 있는 마을만들기센터 또는 도시재생센터와 연계 추진할 의향이 있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사업기간과 사업비 개선으로 S/W사업과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운영관리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필요 시 연차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왔었다며, 사업 담당자들은 연차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사업운영을 위한 주민 협의체 및 마을활동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 및 사후 유지관리에서의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한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업완료 후 사후 프로그램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사후 프로그램 지원의 내용과 기한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지관리 방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비 증액과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시·군에서는 사업의 질 및 사업참여도 향상을 위해서 디자인 전문직 배치의 필요성, 사업추진에 있어서 상호 정보교환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표 3-9] 행정 대상 FGI 조사결과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 선정 방식 (6)	대상지 선정	- 디자인 특화사업은 공모경쟁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또는 주민의지가 있는 지역에는 소액사업 지원 필요 - 소액 지원사업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 발생 예상 - 간단 양식으로 신청하는 소액사업 필요
	기준의 적정성	-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중요 - 타 부서와의 협업과 연계, 디자인 개선 실현가능성,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시·군에서 대상지 선정
	공모기간	- 공모기간은 적정
	사업기간	- 현재 절차 유지 시 사업기간 짧음(2년으로 확대, 경관협정사업은 3년 필요)
	사업 예산	- 가시적 성과 창출 어려움 - 매칭비율을 최소 5:5로 변경 필요
	차등지원방식	- 사업비 차등지원 시 지급 기준 필요 - 소규모 → 중규모 → 대규모 사업의 단계적 추진방식 적용 필요
사업 추진 과정 (7)	디자인 관리 자문단 운영	-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현장자문은 매우 유용하나 사업기간이 짧아 적용 어려움 - 심의 시 디자인관리 자문단 필히 참석 필요 - 디자인관리 자문단 운영 사업은 심의 간소화 등 장치 필요(심의에서는 디자인관리 자문단 의견 제외, 최소 조건부 등)
	추진 체계	- 사업비에 따른 심의 대상 사업 기준 필요 - 1차 심의 시 참석위원이 2차 심의에도 참석하도록 조치
	평가 후 기간/규모 변경	- 3년 이상 사업일 경우 2년차에 중간평가 필요
	의사소통체계 구축	- 디자인 아카데미사업과 디자인관리 자문단 함께 운영 필요 -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 - 1차 : 디자인관리 자문단_주민_도_지자체, 2차 : 주민 제외 협의방식
	융합 및 연계	- 중장기 사업으로 한다면 융합, 단기사업으로 한다면 구분 - 마스터플랜 수립 후 사업 대상지와 내용 구상, 추가사업 신청
	사업 내용	-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우므로, 마을만들기센터, 도시재생센터와 연계 - 도시재생사업에서는 S/W를 무조건 진행 - 사업내용에 따라 S/W사업 병행 필요
	마스터 플랜 지원	- 가장 중요하고 필요 - 타 부서와 협업, 사업의 융합/연계, 디자인 기획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

구분		주요내용
운영 관리 (4)	사후 연차사업 지원	- 선정 및 예산지원 기준 필요
	운영주체 육성	-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 주민참여가 저조하므로 가능할지 의문 - 사업완료 후 주민, 마을활동가의 역할 부재한 상황으로 불필요
	사후 프로그램	-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 운영 필요
		- 사업준공 후 3년간 지원 필요
	유지 관리 방안	- 시·군 마을만들기 센터, 도시재생센터와 협업 운영 필요
필요한 것		- 사업예산 증액,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필요 - 사업 담당자들 간 정보교류 및 지식습득 기회 필요 - 디자인 전문직을 도에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

▼ [표 3-10] 디자인관리 자문단 조사결과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 선정 방식	사업 예산	차등지원 방식	- 소규모 사업은 필요하며, 심의 간소화 및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을 소규모 사업 유형으로 추진 검토 필요
사업 추진 과정 (5)	추진 체계	디자인 관리 자문단 운영	- 디자인관리 자문단과 심의 역할 정립 필요(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과 권한(추진과 정 자문뿐만 아니라 시공단계 디자인적용 검토, 사업완료단계 성과물 확인, 사업완료 1~2년 후 점검 등의 역할 필요)) - 디자인관리 자문단 절차를 진행한 사업은 심의에 반드시 참여, 의견 제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존중하도록 운영 필요 - 디자인관리 자문단 중 한 명은 반드시 사업 공모선정 평가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여 - 디자인 전문직 유무에 따라 디자인관리 자문단 절차 진행 여부 결정(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시·군에 적극적으로 지원 필요) -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 소규모 사업은 디자인관리 자문단 절차를 반드시 진행 필요
		심의	- 소규모/단기/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디자인관리 자문단과 심의로 구분 운영 필요 (소규모/단기사업은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일정 횟수 이상 진행 후 확인 또는 자문으 로 진행, 중장기 사업은 심의)
		사업 내용	- 사업기간 개편은 필요하며, 중간점검과 연차별 사업내용 가이드 제시를 통해 사업기 간에 제대로 사업 진행하도록 유도 필요 - 사업의 융복합, 중장기/단기 사업의 유형화를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이 필요(공공디자인센터가 지원) - 소규모 사업은 필요하며, 심의 간소화 및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마스터 플랜 지원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은 필요하나, 내용, 범위, 예산 등을 분명히 제시 필요
	그 외 기타사항		- 부서 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공모사업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 중요, 유연하게 접근

5.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10년 이상 충남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공모사업은 노후되고 후미진 골목길이 밝고 쾌적해지고, 방범시설 설치로 생활 안전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담당자들의 인터뷰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법광고물 및 무질서한 공공시설물 설치로 난잡했던 경관이 일관성과 조화성을 가진 가로경관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성과도 있었다. 불법쓰레기 투기로 지저분했던 공간이 주민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개선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외부공간을 주민이 가꾸고 관리함으로써 경관가꾸기를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의 자발적 경관관리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와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20년 처음 추진한 경관협정 시범사업의 경우 S/W사업과 H/W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경관의식 향상은 물론 경관을 매개로 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공모사업 추진 실태 분석 및 관련주체 의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이 단발성 및 부분 개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4억 원~5억 원의 균등한 사업비 지원으로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1년 단기사업으로 장소중심의 중장기적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해진 사업비와 사업기간에 맞춰 사업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추진과정상 절차가 많아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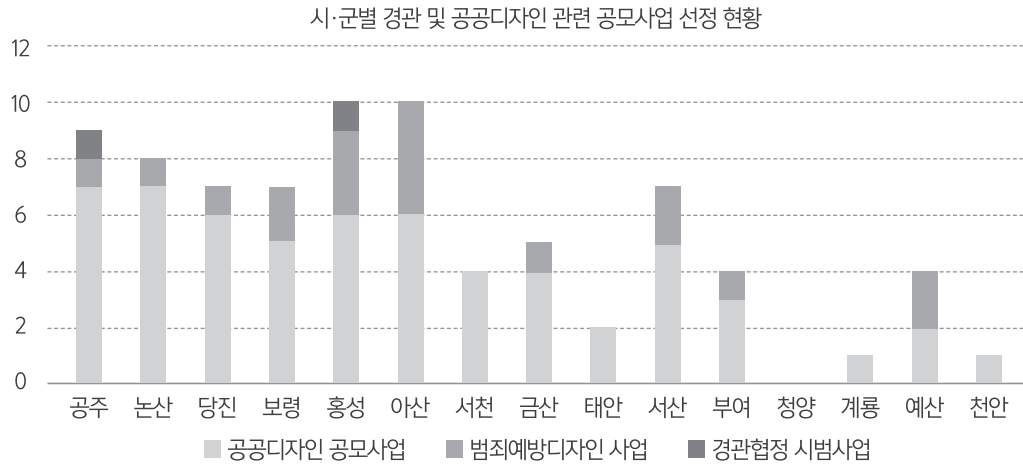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중장기 사업 도입으로 사업내용의 융복합과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성과 및 효과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사업규모와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의 단기사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 사후관리, 디자인관리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모시기 및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군별 사업 참여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15개 시·군 중 10년이 넘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곳도 있고, 1회 또는 2회 선정에 그치는 경우도 3곳이나 되고 있다. 공모사업의 참여도는 디자인 전문직 유무, 사업추진 경험 여부 및 주민 의지 등 지역역량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참여도에 대한 시·군 격차는 결과적으로 충남의 디자인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에, 우선 시·군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중장기 등 사업유형을 다양화하여 사업 경험 부족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봄으로써 지역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현재의 공모경쟁 방식과 더불어 주민과 사업 담당자의 의지가 있는 곳을 서류 평가로 선정해 지원해주는 소규모 사업 유형의 신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자인 전문직 유무에 따른 시·군 간 격차는 충남에서 도입하고 있는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디자인관리 자문단은 사업기간에 비해 행정절차가 많아 1회성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 디자인 전문직이 부재한 시·군에서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3-26] 시·군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현황

셋째,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미흡을 들 수 있다.

사업완료 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 투기, 불법간판 설치, 미작동 시설물 방치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민참여를 위한 S/W사업을 추진 및 적용하기에 부족한 사업기간과 추진방식에서 오는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디자인 아카데미사업과 공모사업의 연계, 사업기간과 사업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양한 주체의 디자인 인식 향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대상 및 범위, 방식 및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현재 H/W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을 디자인 아카데미의 S/W사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및 사업 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분	하드웨어 사업					소프트웨어		
	가로경관			공공공간	방범시설	건축물	주민교육	콘텐츠 개발
	간판정비	보행환경	가로시설	휴게공간				
디자인 아카데미							○	○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	○	○	○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	○	○	○			
경관협정 시범사업	○	○	○	○		○	○	

넷째, 성과관리 미흡을 들 수 있다.

사업 선정 시 계획안, 심의 조치사항 반영안, 사업 결과물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업 성과 질 저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의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과정 및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업 결과물이 좋을 경우 연차사업을 지원해주는 등 사업 담당자와 주민이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자인관리 미흡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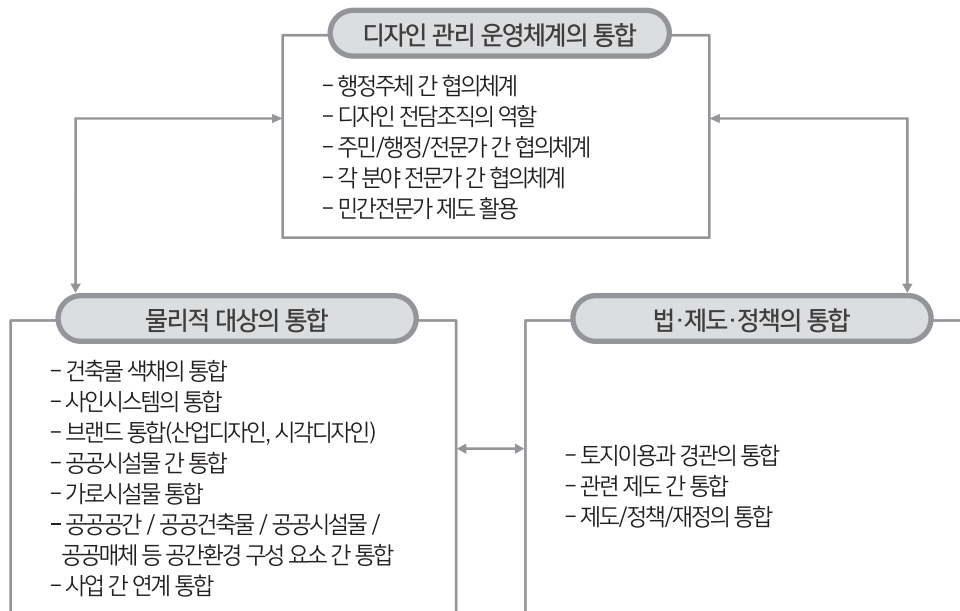
사업완료 후 실태 분석 결과, 심의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업 결과물이 오히려 경관을 저해하고 있거나, 적용된 소재나 재질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는 시공과정에서 사업비 및 주민의견 등에 따라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으며 심의 이후 설계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사업완료 후 1~2년 후 디자인관리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충남에서 도입되고 있는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는 심의 전 단계에서 1~2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현황을 반영하고 주민 및 사업 담당자의 의견 조율 등 현장자문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업단계별 사업당 3~4차례 정도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1~2회 정도에 그치는 이유는 사업기간에 비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어도 심의에서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형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심의의 한계를 보완 및 현장 맞춤형 자문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심의와의 역할 구분 및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명확한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Ⅳ.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1.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와 공모사업 기본방향

중앙부처에서는 개별적·산발적, 부처/부서별 성과위주의 유사사업 중복 추진으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시설 간 연계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타 부처 및 타 부서와의 연계사업, 협업을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간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각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법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 및 부처/부서 간 협업을 유도하면서 사업 간 연계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업을 통한 통합디자인, 통합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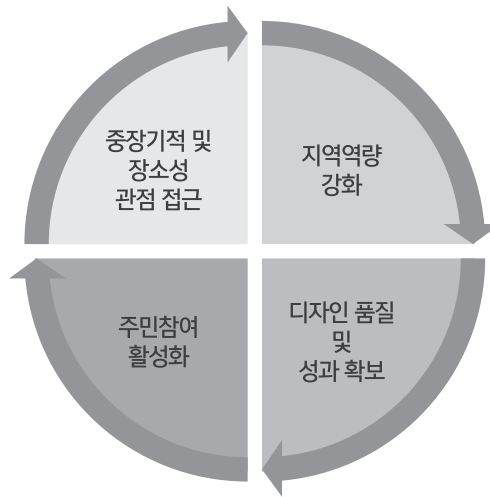
출처 : 박혜은(2021), 행정주체 의식분석을 통한 통합디자인 추진방향, 한국도시설계학회

[그림 4-1] 통합디자인의 개념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충남에서 역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분야 간 통합, 부서 간 통합, 부처 간 통합, 나아가서는 충남과 중앙부처 간 통합을 유도할 필요

가 있다. 이는 큰 틀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방향속에서 장소중심의 계획, 효율적 관리, 시너지 창출 등의 효과로 충남의 정체성 정립은 물론 도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선행연구 및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실태 분석, 사업 담당자 및 전문가 대상 인터뷰조사와 자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개선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림 4-2]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기본방향

기본방향은 4가지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발성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및 장소성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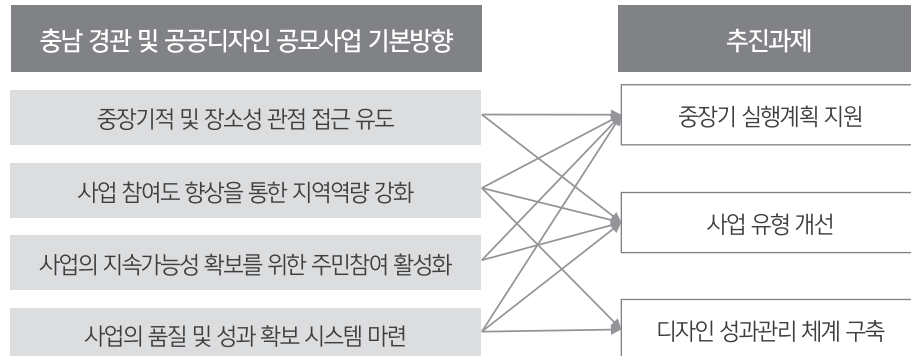
둘째, 15개 시·군 모두의 공모사업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지역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과정 및 사후 유지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의 품질 및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2. 추진과제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는 중장기 실행계획 지원, 사업 유형 개선, 디자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4-3]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개선 기본방향과 추진과제

2.1 추진방향

1)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은 시·군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유지관리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큰 틀에서 해당 시·군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중장기 실행계획은 이들 계획은 물론 시·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생활 SOC 현황 등 지역 현황과 여건 분석을 통해 사업유형을 도출하고, 디자인 품질과 성과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계획에 타 부서 사업이 포함됨으로써 부서 간 협업과 통합, 디자인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H/W와 S/W사업 융합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사업 유형 개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기간 및 예산, 유형으로는 시·군별 사업 참여도 격차가 크고, 사업의

효과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시·군에서 사업준비 및 지역역량 등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여 경험을 쌓으면서 지역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소규모/중장기 사업으로 단계적 및 차등적 지원을 하도록 개선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지역역량이 갖춰진 곳을 선택과 집중 지원하여 사업의 성과를 확보하고, 동시에 시·군의 사업 참여도를 높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남의 디자인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각각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경관협정 등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를 융복합하여 추진, 또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유형을 유연화 하도록 한다. 이는 시·군 현황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의 사업 참여도 향상은 물론 사업의 효과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디자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현재의 사업 추진방식은 주민참여를 도모하기에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사업 추진방식 등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 개선과 함께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과정 중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토대로 현장중심형 및 주민참여중심 자문방식의 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강화하도록 한다.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가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규모별 디자인관리 자문단과 심의 역할을 구분하고,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참여한 사업 심의에서 제시한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심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도록 한다. 즉, 주민 참여 활성화와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 정립을 통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사업유형 개선에서 중장기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중장기 사업의 경우 3년 이상의 사업을 의미하며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2년차에 중간평가를 진행하여 사업비 지속 지원 여부 및 자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장 특성을 적용한 맞춤형 사후 프로그램 지원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시·군 담당자들의 사업 참여도와 의지를 높이기 위해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평가 후 연차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2 개선방향

현재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중 공공디자인 사업과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은 1년간 단기사업으로 H/W중심 사업, 경관협정 시범사업은 2년간 H/W와 S/W 병행 사업,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8개월 간 S/W 사업이다.

이에, ①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부서 간 통합 및 분야 간 융복합, H/W와 S/W의 병행을 위해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공모사업을 신설하고, ②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의 내용 개선,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③현재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경관협정 사업은 융복합으로 3년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의 2년간 단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④6개월~1년간 시·군 특성에 맞게 주제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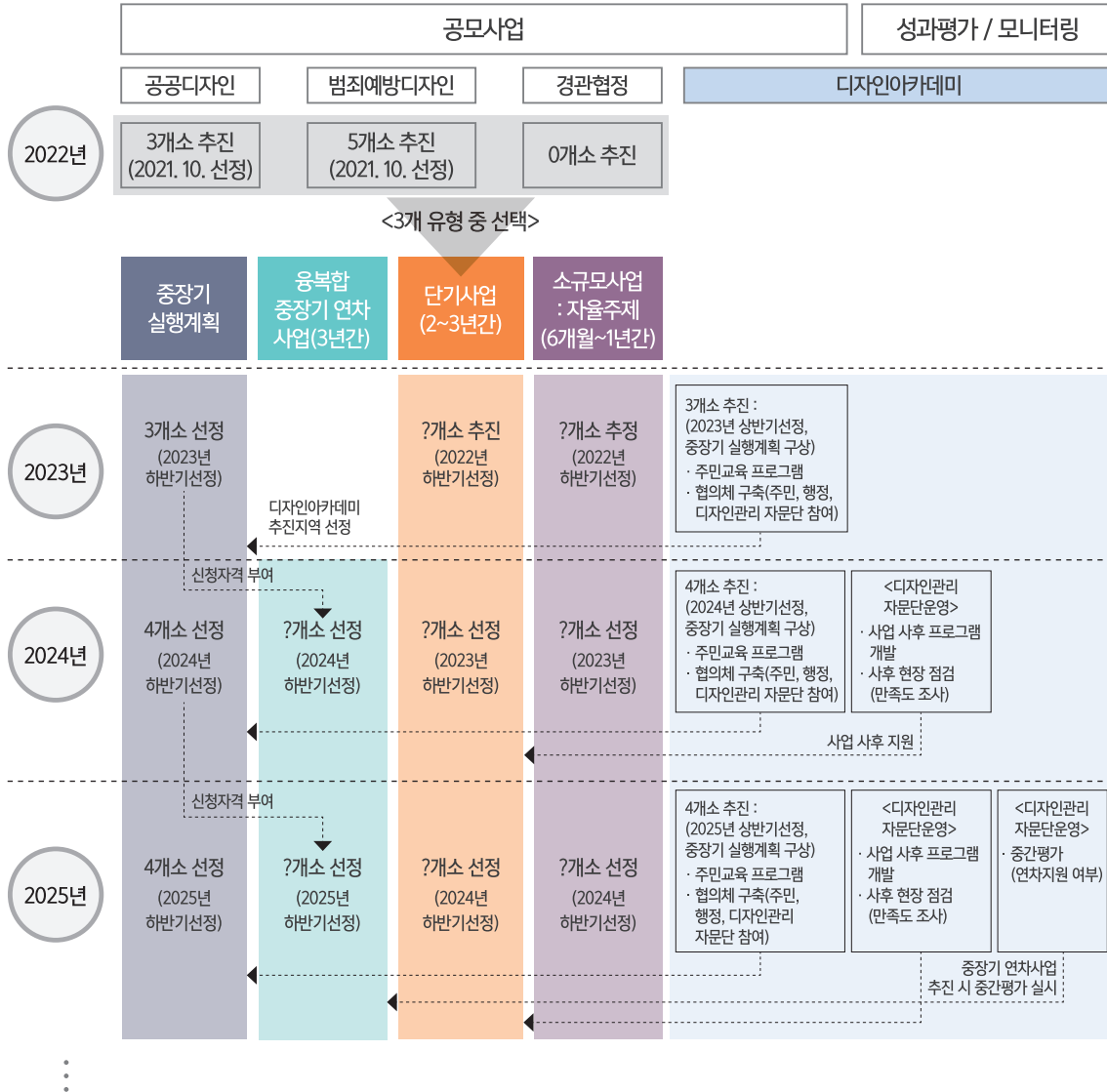
우선,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은 주민_디자인관리 자문단_행정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디자인 구상(안)을 마련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리고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개선한다.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되는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중장기 디자인 구상(안)을 도출한 시·군에서는 중장기 실행계획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에 선정되어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한 시·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경관협정 사업 중 2~3년 단기사업 및 이 사업들의 융복합 사업이라 할 수 있는 3년간 중장기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2년차에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사후 프로그램은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군 사업 대상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사업 담당자 표창 또는 차년도 공모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즉,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중장기 실행계획 공모신청을 위한 중장기 디자인 구상(안) 도출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자인관리 자문단에 의한 중장기 사업 중간평가 운영, 디자인관리 자문단에 의한 사업완료 후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토대로 한 사후 프로그램 제안 운영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중장기 실행계획은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을 득한 시·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점차 대상지 수를 확대하여 5년 뒤인 2026년에는 모든 시·군에 중장기 실행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경험이 부족하거나 디자인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서는 공모경쟁 방식이 아닌 간단한 서류심사로 소규모 사업에 신청하여 자율 주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액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후 사업 경험을 쌓고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경관협정의 2년간, 3년간 단기사업에 공모신청하여 추진하거나, 또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위한 디자인 아카데미 사업에 신청하여 교육 이수 후 단기사업 또는 중장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즉, 단계별로 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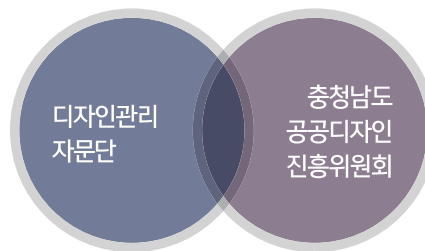
[그림 4-4]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체계 개선방향

디자인관리 자문단 구성은 현재와 동일하게 3인으로 구성하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심의와 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유형별로 디자인관리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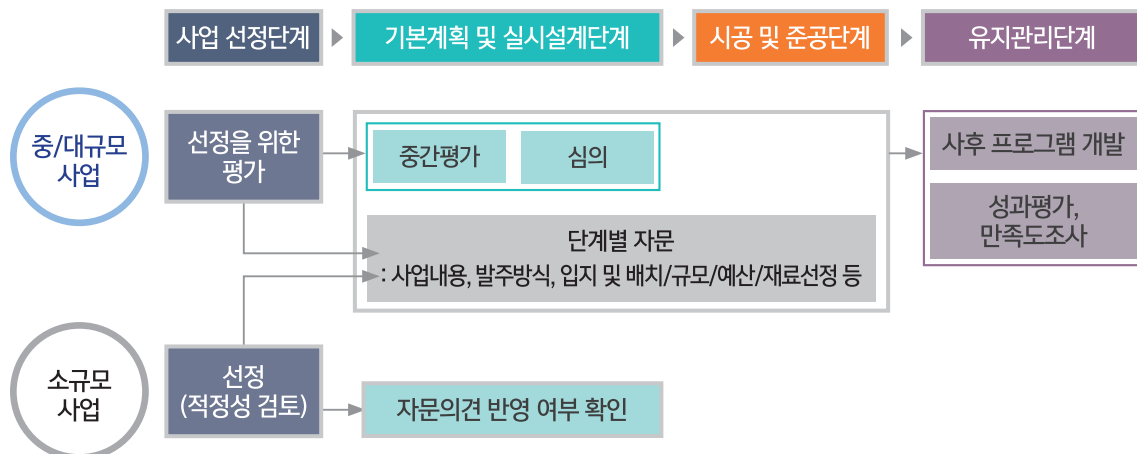
단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각 제도의 역할 충실 및 효과 확보, 사업의 질 확보 및 사업 담당자들의 부담을 저감시키도록 한다.

소규모 사업은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사업 단계별로 자문을 진행하고 도 담당자_시·군 담당자_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최종적으로 자문결과를 확인하여 심의를 대신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2년간 단기사업과 3년간 중장기 사업은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사업 단계별로 자문을 진행하고 디자인관리 자문단 중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소속 전문가가 심의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며,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의견이 심의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도 심의 담당자가 심의 운영 전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관리 자문단은 이와 같이 사업추진 단계별 자문과 심의에서 대상지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예산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연차사업 지원 여부 및 사후 프로그램 내용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그림 4-5] 충남 디자인관리 자문단 구성



[그림 4-6] 충남 사업유형별 디자인관리 자문단 역할

V.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에서는 자체적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을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간의 장소성 중심, 부처 및 분야 간 통합 등 통합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론 및 문헌고찰을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추진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헌고찰 및 인터뷰조사를 통해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부처 간 통합, 민간전문가 활용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활용과 유사사업 중복 추진 방식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매년 단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의 공모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 역시 충남과 같이 자체적으로 자원의 보존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의 정체성 유지 등 각 지자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체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경기도는 1년 단기사업의 사업비 균등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충남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추진 일정의 촉박함으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와 시·군 상황 고려없이 정액 균등 보조방식 등의 문제가 사업성과 향상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사업내용 및 유형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운영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즉, 광역지자체에서는 타 부서와의 통합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중앙부처의 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지만, 시·군의 특성과 사업성과 확보를 위해 사업내용 및 유형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비의 차등 지원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관련 주체인 시·군 담당자, 디자인관리 자문단(전문가) 대상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충남에서는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사업비 확대 및 사업유형 다양화 등 공모사업을 점차 확대해왔으며, 사업추진 결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4억 원~5억 원의 균등한 사업비 지원으로 단발성 및 부분 개선에 그치는 한계, 디자인

전문직 유무와 사업 경험 여부에 따른 시·군별 사업 참여도 격차 발생, 주민참여 부재로 인한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미흡, 모니터링 및 단계별 디자인지원 미흡에 따른 성과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

이는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식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시·군 자체적으로 추가 사업비 투입이 가능한 곳을 제외하고는 사업의 취지나 효과보다는 우선 사업비에 맞춰 사업내용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년이라는 사업기간내에 추진하기에는 행정절차가 많아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의 품질보다는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충남에서 2021년부터 사업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에 대해 사업 담당자들은 효과를 인지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1회성 절차로 활용하는 실정이며, 사업 결과물이 주민에 의해 유지관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15개 시·군 중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 6개 시·군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업 참여도가 낮아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충남에서는 디자인 전문직이 부재한 시·군이 많으므로 순환보직이라는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역량을 키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공모사업을 통한 통합디자인 추구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충남에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공모사업 개선을 위한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모사업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체계 분석, 충남의 공모사업 추진실태와 관련주체 인터뷰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①단발성 단기사업이 아닌 중장기적 및 장소성 관점에서 사업을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②15개 시·군 모두의 공모사업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지역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 ③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과정 및 사후 유지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④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한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의 품질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서, 우선 중장기 실행계획 지원을 제시하였다. 지금은 매년 시·군 담당자들이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신청하고 있으나, 주민_행정_전문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공모사업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점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디자인 일관성 확보는 물론 충남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 사업 간 융복합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및 통합디자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유형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충남의 15개 시·군은 지역적 및 인적 특성이 각기 다르므로 특성과 역량에 맞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단계적 및 차등적 지원 방식을 제시하였다. 즉, 시·군이 지역역량을 키워가도록 사업규모와 기간 및 예산을 다양화함으로써 시·군의 사업 참여도를 높여 지역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충남 공모사업의 H/W사업과 S/W사업 간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현장중심형 자문방식 강화 및 심의제도와 역할 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단계별 디자인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업유형별로 중간평가 진행을 통해 사업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사후 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충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공모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물론 본 연구는 큰 틀에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중장기 실행계획의 범위와 수립 주체, 사업 유형별 사업 선정방식 및 참여주체인 도_지자체_주민_전문가의 연차별 역할,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지원 범위 및 방식, 연차별/사업유형별 사업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로, 연구자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연구로서 후속과제로 진행하고자 한다.

■ 참고 문헌

1. 국토교통부(2020),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2.28.), 올해 소규모 재생사업 약 70곳 선정한다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4.21.),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지원하세요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6.9.), 올해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고
5. 김덕준·김미옥·남윤명·박광석·성보현·원광희·정지훈·채성주·최은희(2019), 정부 공모과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북연구원
6. 김주현·김한수(2021), 마을만들기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 B군을 중심으로 -,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3(1)
7. 김홍주·김륜희(2016), 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을 사례로-,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9(3)
8.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2021), 2021년 농촌협약 추진계획
9. 농림축산식품부(20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0. 박혜은·방재성·오병찬·김성희(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11. 박혜은·방재성·오병찬·김성희(2018),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12. 박혜은·오병찬·김성희(2019),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13. 박혜은·오병찬·강경연(2021),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14. 박혜은(2021), 행정주체 의식분석을 통한 통합디자인 추진방향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5. 엄철호·김은희(2013),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16. 우장명(2015), 충북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분석 -2015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시군 창의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충북연구원, 충북FOCUS
17. 유아람·유해연(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4(12)
18. 이영아(2021), 현장 중심적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 경북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7(2)
19. 조진호·최열(2018), 장소애착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 및 Gentrification에 대한 주민 의식 분석 : 도시재생 사업지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16(1)
20. 최영완·김근호·은희창·이영규·김영주(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농촌계획 제22권 제21호
21.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 내부자료
2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
23. 충청남도 경관 조례

■ 부록

1. 디자인 전문직 FGI조사

- 일 시 : 2021년 11월 24일, 14:00~18:00
- 장 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 참석자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서산시, 홍성군 사업 담당자 8명

<사업선정방식>

1. 대상지 선정방식에서 공모경쟁 방식과 지역역량이 부족한 곳도 선정해주는 방식(사업비 일부)으로 변경한다면?

- 공모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의지가 있는 곳을 선정해줄 필요가 있음. 사업에 공모했다는 것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공모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는 이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함
- 디자인 사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공모경쟁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사업비(매칭비율)가 적어지는 것이 더 문제임. 지역안배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선정 시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
- 공모경쟁과 병행하여 사업 지원이 필요한 곳도 지원하면 좋겠음(공모경쟁은 2, 3개 정도로 하고, 필요한 지역은 나머지를 선정하는 방식). 지역에서 의지나 어필을 한다면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타 시·군에 파급력이 있는 특화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공모경쟁으로 하고, 범죄나 안전을 위한 사업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지인, 친분에 의한 선정이 되지 않게 사전에 평가방식을 마련할 필요)
- 지역에서 소액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방 소진되는 상황임. 사업비 2천만 원 정도(5:5)의 소액사업은 지역역량이 부족해도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음

2. 현재 대상지 선정 기준은 적절한지?(타 연계사업 추진 등 기준)

- 타 연계사업 추진 여부 및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려움. 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타 부서와의 연계성을 선정기준에 넣을 필요가 있음
- 2021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 녹지과, 문화관광과와 함께 미진한 부분에 디자인을 접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처음부터 타 부서와 협업한다면 큰 문제는 없음. 하지만 관리

할 때에는 유지비, 예산확보 등의 문제는 생김

- 홍성의 경우 공공시설물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님.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음. 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 타 부서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 예산도 나뉘어 있음.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역할, 예산을 구분하여 하고 있음. 디자인팀의 역할은 군 전체의 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취합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타 연계사업 추진 여부가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 보통 담당하 업무만 하려고 하는데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전에 디자인 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디자인팀의 역할)

3. 공모기간은 사업 준비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 충분한지?

- 항상 공모하는 기간에 사업공모를 하고 있어 이에 맞춰 사전에 준비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음

4. 1년 6개월의 사업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협의체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인지?

- 원래 사업기간은 1년이며, 심의 절차도 있어 조치사항을 반영하거나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 사업기간은 부족함. 보통 중간에 6개월 정도 사업중지를 함
- 공모결과가 10월 초에 결정이 되어야 시·군에서는 본예산을 수립할 수 있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은 부족함. 디자인관리 자문단 1회(1달), 심의(2달~3달), 사업비가 5억이 넘으면 도 계약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시·군 계약심사를 받아야 함. 절차가 매우 많음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디자인과 시공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별도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 절차기간으로 5개월이 소요되어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음
- 거리정비나 간판정비 관련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2, 3번을 해야 하므로 사업기간은 더 길어짐
- 현재의 사업비와 사업내용으로 한다면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음

5. 사업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 타 중앙부처 사업은 예산도 크고, 매칭비율이 7:3인 곳이 없음. 현재의 사업비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움

6.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른 예산의 차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좋은 방법이며,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상지 선정 시 평가위원들이 계획서와 사업범위 대비 정해진 사업비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가위원들이 논의, 판단하여 사업비

- 조정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는 차년도에 연차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정해진 사업비로 진행하는 것보다 차등지원(연차사업이나 연계사업 등)이 필요함
- 예산 차등지원은 바람직하며, 단 차등지원 기준이 필요함. 논산의 경우 시비매칭 비율이 더 많은 경우가 많았음. 범죄예방사업비가 3억 원이라면 사업대상지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시비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음.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비 3억 원에 맞추기보다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성과평가를 통해 연차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현재처럼 균등하게 사업비로 진행하면 됨

<사업 추진과정>

1.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시·군에서 필요 시 자발적으로 지원 요청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업기간이 짧아 제도 적용이 힘든 상황임. 물론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자문해 주는 것은 효과가 있지만 사업기간이 짧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임. 자문단의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은 필요함
- 자문위원 중에 교수가 대부분인데 디자인 대표도 구성하여 사업 경험을 통한 자문이 필요함
- 자문단 구성에 긍정적이었던 이유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임. 사전심의 방식이 아니라 용역사와 함께 논의해가는 방식이 필요함. 심의를 더 받는 형식이라면 사전심의가 더 낫다고 생각함
- 사업 대상지나 현장에 따라 다른 것 같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자율적으로 받도록 했으면 좋겠음. 심의에 잘 통과하려고 받는 경우도 있음
- 심의를 통과하기 쉽게 해준다고 해서 긍정적이었음. 심의에서 자문단이 참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임. 심의에서 자문단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한다면 좋을 것 같음
- 시·군에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군에서 꼭 받고 싶은 자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 자문단이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자문단 구성에서 분야가 다른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및 방법,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를 적용한 것을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경우 심의에 통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심의와 재심 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이 바뀌는 상황이면 문제가 생김. 1차 심의 때 참석했던 심의위원이 참석할 수 있

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를 이용하면 자문단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장을 모르는 심의 위원을 위해 일일이 설명하다보면 사업기간이 더 길어짐.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는 주민들도 좋아하므로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현장을 알고 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사업비가 4천만 원인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서면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7명 중 5명이 현장을 모르면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서면심의의 경우).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면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방식이 좋음
- 논산의 경우 경관심의를 진행할 때 현장을 보거나, 드론으로 심의위원에게 영상으로 보여준 경우가 있음. 현장을 모르면 심의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3.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이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전평가를 해서 3년 중장기 사업이 적합한 경우 1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원래대로 지원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음

4. 충청남도_지자체_디자인관리 자문단_주민 간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사업을 분리해야 할 것 같음. 사적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함.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에서 현재 공모 선정된 곳 대상으로 추진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자인관리 자문단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도에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무장이나, 디자인을 했던 실무자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호응이 좋았음.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에서 범죄예방사업이나 경관협정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은 관련 실과 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의견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면 좋겠음
- 추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현장에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과 의사소통을 통해 자문을 하고, 심의에 자문단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임
-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이 용역으로 되면서 하나의 행사와 같이 되어버린 것 같음. 사업의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할 필요 있음. 도시재생센터, 마을만들기센터와 연계해서 경관, 디자인 관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아카데미사업의 연계방안이 필요함. 최근에는 마을발전계획에 경관부분이 반드시 포함됨
- 사업에 공모하는 신청지는 주로 마을만들기센터를 통해 추천을 받고 있음. 디자인 아카데미 교육에서는 해외 사례나 마을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마을 현황에 부합한 사례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마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음

- 디자인 아카데미사업 역시 사업내용이나 대상지에 따라 필요한 곳이 있음. 논산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공모 사업으로 추진했던 오거리 사업은 아카데미 교육이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마을 사업 추진지를 추천해줬음
- 협의 체계 구축은 필요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카데미 강사 선정은 사업 대상지 내용과 연관성이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대상지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의 강의로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분야와 사업내용과 관련된 강사 및 내용으로 교육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5.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경관협정 등 사업내용을 융합 및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중장기 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융합, 연계해야 하고, 단기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경관협정은 사업기간을 최소 3년으로 해야 함
- 범죄예방디자인, 공공디자인은 2년 정도 사업기간이 필요함
- 범죄예방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대상지 선정할 때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융합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6. 현재 공모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적음.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한다면 인력도 부족하다고 생각함. 사업비를 지원해준다면 마을만들기센터나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음
- 사업내용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마을단위 사업에서는 필요하며, 사업내용이나 대상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음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한다면 충청남도 예산에서 시설비와 연구용역비로 구분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음
- 논산 양지뜸 마을의 경우 농식품부 경관사업을 연계해서 했었음

7.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필요함. 타 실과와 협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개별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더욱 필요하고 중요함
- 법에 의해 계획, 위원회 구성 등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는 심의 대상사업은 관리하고 있음.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마스터플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기획단계에서 디자인 협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함

- 타 공모사업보다 더욱 중요함
- 예산부서에서는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상황이고, 필요하므로 공모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특정지역 또는 특화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공간계획 전략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 계획 수립 후 사업 신청을 하면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가 필요함

<운영관리>

1.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연차사업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필요함. 논산의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한 결과 사업 완성도가 높아졌음.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했지만 일부를 못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사업운영을 위한 협의체 작동 및 마을 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양지뜸 마을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가 됨. 마을이 깨끗해지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마을의 움직임이 있음. 마을 자체적으로 도로변에 꽃을 심는 경우도 있음

3.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음
- 마을단위 사업을 한 후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연차사업이나 사후 프로그램 지원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마을 단위의 경우 가능하지만 도심지의 경우에는 힘들 수 있음

4.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사업예산이 늘었으면 좋겠음. 마스터플랜 또는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자체에서 사업을 했을 경우, 어려웠던 점 또는 효과가 좋았던 점(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을 서로 의견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사업 경험담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함. 디자인 전문직이 아닌 경우 사업 추진하는 방법을 잘 모르므로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가 필요함. 성과보고회를 통해 효과가 있고 타 시·군에 파급력이 있는 사례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기회가 필요함(15개 시·군 사업 담당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도 경험이 없는 담당자는 어려워 함

2. 시설 건축직/일반 행정직 FGI조사

- 일 시 : 2021년 11월 29일/12월 1일, 14:00~17:00
- 장 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 참석자 : 보령시, 아산시, 예산군,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담당자 6명

<사업선정방식>

1. 대상지 선정방식에서 공모경쟁 방식과 지역역량이 부족한 곳도 선정해주는 방식(사업비 일부)으로 변경한다면?

- 함께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지역역량이 부족하여 소액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경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음
- 계룡시의 경우, 사업 선정 후 사업비가 늘면서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있음. 소액으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액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음
-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신청하는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음

2. 현재 선정 기준은 적정한지?(타 연계사업 추진 등 기준)

-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내에서도 안배차원에서 지역을 선정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연계할만한 사업이 별로 없음. 새로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보니 연계할만한 사업이 없음. 선정기준에 있어서 디자인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에 대하여 평가가 우선되어야 함. 디자인 전문가 위촉, 디자인 전문직 활용 등의 평가보다는 디자인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음
- 디자인 전문직의 필요성을 요구하긴 했었으나, 군 단위에서는 쉽지 않음

3. 공모기간은 사업 준비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에 충분한지?

- 디자인 용역을 발주해서 상반기에 준비하고 하반기에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기간은 간단한 페이퍼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음. 7월에 공고, 9월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 있는데 5월에 공고, 8월이나 9월 초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결과물 위주로 평가하는 심사로 진행되는 것 같음. 아이디어 제안이라면 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음
- 대상지만 있다면 준비하는 기간은 크게 상관이 없음. 기간 자체는 큰 문제 없음
 - 협의체 구축을 공모 전에 하게 된다면 공모기간이 짧음

4. 1년 6개월의 사업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협의체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인지?

- 사업기간은 충분함. 사업진행 할 때 연계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공사 순서에 따라 사업이 늦춰지는 경우, 충분한 경우도 있음
- 대상지가 기반이 갖춰져 있는 경우 1년 사업기간은 충분함. 심의를 3개월 가까이 진행하더라도 디자인 방향이 명확하다면 가능함. 다만 디자인을 뽑아내는 데에 있어서 2, 3차례 자문을 받는 절차가 있으므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인데, 1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공모선정 후에는 협의체가 구축되었으므로 사업기간은 짧지 않음
- 이전에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보통 사업기간을 2년 정도 했던 것 같음. 설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다보니, 설계가 1년 정도 걸리고 예산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등까지 포함해서 1년 정도 소요되므로 기간이 짧음. 2년 정도면 충분하고 빠르면 1년 6개월 정도가 보통 소요된다고 생각함
- 1년은 짧음.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심의가 힘들었음. 현재는 사전심의 후 진행하므로 이전보다 수월하지만, 심의 과정만 6개월 정도 소요되었음. 사업기간은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함.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년에 끝낼 수 있지만 주민의견, 심의과정 등을 거치게 되면 2년 정도는 필요함
- 보통 2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음

5. 사업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 사업비가 커야 효과가 있음. 투자대비 효과는 선택과 집중 방식이 맞다고 생각함
- 사업비 3:7 매칭으로 하면서 모든 절차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군에서도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려움. 최소 5:5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범죄예방이나 공공디자인 사업은 주민들 만족도가 중요하므로 담당자는 힘들지만 3:7 매칭이라고 해도 공모에 신청할 것임
-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하다보니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어려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2개 사업은 10억 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6.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른 예산의 차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좋은 것 같음. 세부적인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 같음
- 심사할 때 예산항목도 있어야 할 것임. 차등지급 방식이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음
- 다양한 참여나 내실있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좋을 것 같긴 하나, 큰 규모의 사업유형으로 집중될 것 같고, 디자인 직렬이 있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차지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음
- 좋은 취지이며, 차등을 주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함. 마을 숙원사업으로 소액사업은 필요할 것 같음(마을 이장님이 원하는 경우도 있음). 소액사업을 해보고 마을 주민들의 의지가 높아져서 중규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예비사업(소규모 재생사업)을 하고 난 후 중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 추진과정>

1.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정기적 및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예산군의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함. 심의 진행 후 결과 반영할 때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면 좋다고 생각함. 특히 현장자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재심의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좋으나, 자문단이 심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음
- 자문단 운영보다는 심의위원이 사전에 사전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문단의 의견 반영 여부 위주로 심의에서 보도록 한다는 등 장치가 있어야 함

2.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심의 대상 및 방법,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사업비에 따라 자문이나 심의기준 규정이 없으므로, 소액사업의 경우 용역비가 따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데 부담이 됨
-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진행한 경우 자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음
- 예산군의 경우, 아파트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건축심의를 하는데 도에서 사전심의를 받으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심의에서 최소한 재심의를 없고 조건부심의임.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 최소한 조건부로 해주었으면 좋겠음
- 1차 심의에 참석했던 심의위원이 2차 심의에도 참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심의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심의내용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언급되지 않았음

면 좋겠음.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이 있으므로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인정해주는 등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3. 중장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기간이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하다면 좋으나, 공사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곤란함
-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변경할 수는 있을 것 같음
- 필요하다고 생각함. 중장기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에 의해 내용이 바뀔 수 밖에 없음. 중간평가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초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사업비 지출 정도를 판단하게 됨. 사업에 선정된 후 디자인관리 자문단,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결과가 도출되는 2년차 때 중간평가가 필요함

4. 도_지자체_디자인관리 자문단_주민 간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어쩔 수 없이 행정주도로 해야 결과물이 나오므로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음
- 의사소통 체계 구축이 되지 않아 곤란했던 점은 주민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임. 디자인관리 자문단과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1차는 도_지자체_디자인관리 자문단_주민 구성으로, 2차는 주민을 제외한 협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함)
- 필요함.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함. 지자체가 중심으로 하되 도가 확인만 하는 것인지, 주민 대표만 나오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음. 3년간 중장기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함

5.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경관협정 등 사업내용의 융합 및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융합과 연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음
- 필요하다고 생각함.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과만 바라면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 후 추가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좋을 것 같음. 과정에서 디자인관리 자문단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음. 각 시·군마다 관광 등 특화하고자 하는 자원이 각기 다르므로 시·군 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후 융합 연계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지만 범죄예방을 적용할 수 있기도 함
- 공모단계에서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으면 공모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함
- 융합을 한다면 중장기 사업의 경우에 해당될 것임

6. 하드웨어 중심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예산군의 경우, 도시재생센터, 행복마을지원센터가 있어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소액사업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함.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으므로 경관이나 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음. 아예 관심이 없는 곳은 할 수가 없으므로 이런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음
-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나, 주민들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에만 관심이 있고 의식전환은 힘들 것 같음. 유지관리비를 시·군에서 미리 확보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대학을 경험해 본 바로는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함. 기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를 활용해서 이미 지역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역량사업에 공모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음. 지역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소액사업을 신청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음
- 도시재생쪽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무조건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사업기간으로는 단순한 범위까지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3, 4년 도시재생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주민들도 있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7. 마스터플랜 등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당연히 필요함

<운영관리>

1.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연차사업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좋다고 생각함
- 신규사업 공모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었음. 예전에는 공모사업에서 제안서 평가없이 사업 성과만 평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했었음. 공모사업 형식으로 단기사업의 연장선상 취지에서 자체에서 신청하는 방식임
- 신청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간의 확장에서 봤을 때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연차사업 신청이 유리할 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예산규모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을 위한 협의체 작동 및 마을활동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사업완료 후 하드웨어 사업은 담당 부서에 이관함
- 아산시외의 경우 CCTV는 이관하지만 도장 등은 이관할 수 없으므로 유지관리 비용을 세워서 유지관리 하고 있음. 또는 예산팀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세우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음
- 예산군의 경우 예산을 세워서 하고 유지관리 하고 있음. 주민들에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좋는데 주민들이 하려고 하지 않음
-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협의체나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특별히 없음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협의체나 마을활동가 육성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 운영관리까지 주민이 수익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필요하므로 하고 있음(조합).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인데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임. 1, 2년 사업에서 주민이 운영관리 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을까 함

3.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사업준공 후 3년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사업비가 적다면 신청하는 곳은 별로 없을 것 같음
- 아이디어가 있다면 신청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용으로 사업신청을 해야 할 지 담당자 입장에 서는 어려울 것 같음
- 시·군 행복마을센터나 도시재생센터와 협업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신규 발굴해서 디자인개발 하는 것도 중요하나, 유지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업선정 시 참여도도 높고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하는 이유가 이런 것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함
- 주민 생각은 한번 지원해주고 끝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후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현재 사업들은 모두 사후 지원해주는 것이 없음. 있다면 좋을 것 같음

4. 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시·군 교차점검방식으로 사업 선정 대상지에 대해 알아보고,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하는 디자인 마인드 향상이 필요함
- 공모사업 대상지(완료된 곳, 또는 선정된 곳)에 대한 발표회 등 정보교류 및 습득의 기회가 필요함
- 사업의 선택과 집중방식,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디자인 전문직을 도에서 배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디자인관리 자문단 인터뷰조사 및 자문회의

- 일 시 : 2021년 12월 23일/12월 24일, 10:00~12:00
- 장 소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회의실, 서면
- 참석자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이선주 건축사(에이스건축사사무소),
이종세 교수(건양대학교)

1.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공공디자인/범죄예방디자인/경관협정)을 융복합 중장기 연차사업(3년간), 선택형 단기사업(2년~3년간)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그림 1 참고)?

A : 좋다고 생각함. 하지만 심의나 자문을 하면서 느낀 것은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시간에 쫓겨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음. 3년 또는 2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기간에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년의 기간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짧음. 사업성과 측면에서도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어디든 똑같은 사업을 계획하는 곳이 많음.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역시 중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마스터플랜이 중요함.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디자인 지원이나 교육 등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함

B : 마스터플랜에 의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장기, 중기, 단기로 나눠야 함. 사업특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져야 함. 이에 대한 조율 및 사업계획 수립을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사업의 비전과 목적,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을 시·군에 나누어 주는 것은 사업성과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도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정해서 장기, 중기, 단기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함. 기존 사업들이나 현행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어떻게 관리하고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함. 비전을 먼저 설정한 후 진행해야 할 것임

C : 기존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융복합 할 수 있는 중장기 사업과 단일 유형의 단기사업으로, 사업기간을 각기 3년과 2년으로 개편하는 것은 사업 추진 입장에서는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연차사업의 경우라도 각 년차별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진행정도)을 어느 정도 가이드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초반 1-2년 사업진행을 미루다 결국 마지막 년차에 급하게 추진하여 결국 1년차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음. 이와 함께 연차 사업 추진 시, 사업추진 지자체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공모사업 기획 시 고려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음

2. 시·군에서 자율 주제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6개월~1년간)과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사업을 신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그림 1 참고)?

A : 아산의 경우, 소규모 사업도 많고 1년, 2년 사업도 많음. 문제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임.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완료 후 끝이라는 생각과 심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심의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음. 소규모 사업을 도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매우 중요한 사업이나, 가시적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귀찮아 할 수도 있음. 그러므로 소규모 사업의 경우 디자인 지원을 더욱 해줄 필요가 있음

B : 중장기와 단기사업은 구분이 되어야 함.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심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경우도 많음.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시·군의 경우 누가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봐야 함.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는 축소가 필요함. 시·군 사업은 부서마다 사업이 분리가 됨. 시·군의 기획팀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디자인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군에서 디자인 전문직이 없어서 참여도가 낮은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해주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C : 소규모 사업의 경우, 주로 단순한 H/W 개선사업으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공모사업(도비 지원)으로 추진해야 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분야의 디자인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이와 함께 디자인 아카데미와 같은 S/W사업을 소규모 사업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중장기 실행계획의 경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이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으면 실제 계획 수립이 어려울 수 있음. 계획의 성격(범위, 내용, 수립주체, 예산 등)을 파악하고 난 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3. 공모사업은 사업 선정 후 디자인관리 자문단(단계별 자문), 공공디자인(경관) 심의, 도(시·군) 계약심사, 기본계획/설계/시공 발주, 공사 및 준공 등 절차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가운데, 사업 효과를 위한 디자인 관리 자문단이 현재와 같이 역할(단계별 자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A : 담당 공무원의 생각이 디자인관리 자문단 절차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음. 조금 더 자문단의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자문을 해도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형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공무원도 자문을 받는 것을 귀찮아 함. 자문단이 자문을 하면 심의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또한 공사, 준공 시에도 연락을 받지 못했음. 심의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음. 시공단계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디자인 일 경우가 많으므로 자문단의 역할이 많을 것 같음. 그리고 성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이 필요함.

자문단이 심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 담당자가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자문단이 현장 상황 등을 심의에서 설명해주는 것이 좋음.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완성되기 전 단계, 그리고 사업 담당자가 필요할 때 수시 연락하는 방식으로 디자인관리 자문단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음

B :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디자인관리 자문단, 심의, 사업 선정 평가위원회의 3개로 구분됨.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디자인관리 자문단 중 한 명은 사업 공모선정 평가위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평가점수에 반영되지는 않더라도 사업 평가에 참여하는 등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서울의 마을건축가와 같이 자문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자문단, 심의 절차 모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C : 계약심사, 기본계획/설계/시공 발주, 공사 및 준공 등은 일반적인 사업추진 절차이므로 이러한 과정이 복잡한 것과 단계별 자문, 심의단계 등이 어려운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함. 현 시점에서 자문단 제도(단계별 자문)와 공공디자인(경관) 심의에 대해 집중하여 검토가 필요함. 현재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족하고 디자인관리 자문단의 역할과 권한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음. 디자인 자문은, 주민, 지자체, 용역사 사이에서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이 해당 공모사업 취지에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가로서 현장 중심으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특히 주민, 지자체, 용역사 간에 의견이 상충될 경우, 모니터링 팀과 함께 개입하여 조율을 할 수도 있음

4.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 활용과 공공디자인(경관) 심의 모두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A : 심의에 참석했을 때 보면, 디자인관리 자문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음. 디자인 자문단이 참여했던 사업은 심의도서 질이 좋음. 심의는 디자인관리 자문단과 심의위원 1, 2명 정도의 소규모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경우 재심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자문단에게 역할(책임, 권한)을 줘서 현장에 맞게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디자인 전문직이 있는 경우 심의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열악한 시·군에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곳에서는 자문단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B : 자문단에게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줄 필요가 있음.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C : 심의는 공모사업 결과물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 예산지원이 적절하였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함(다른 안건과 다르게 디자인 측면에서는 자문정도의 역할이면 충분함). 물론 디자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디자인관리 자문단에 의해 수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단계에서 걸러내야 함. 또한 향후 단계별 사업으로 개편할 경우, 2년차, 3년차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별도의 공모사업 운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심의(이 경우에는 도 심의)를 활용해서 이를 걸러낼 수 있음. 따라서 디자인관리 자문단에 반드시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심의 위원 1명 이상 포함시키고, 해당위원이 해당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와 공공디자인(경관) 심의가 상호보완 또는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의 차별화 방안이 있는지? 현장상황 파악 어려움이라는 심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자인관리 자문단 제도는 현장중심 및 주민참여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협의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내용임. 주민참여를 하면 유지관리나 애착을 갖게 되므로 주민참여는 필요함. 탑다운 방식은 공무원 중심으로 되다 보니 공무원이 사업하기 편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주민참여가 꼭 필요하고 세금이 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본인이 참여하고 가꾸어 간다고 생각하면 중장기 계획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꾸준히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B : 협의체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임. 협의체를 포인트로 삼아서 했으면 좋겠음

6.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사업비 상관없이 모두 충청남도 공공디자인(경관) 심의 대상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 소규모, 단기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자문단과 심의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B : 단기사업, 소규모 사업은 심의가 아닌 자문단에서 해결, 중장기 사업은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음. 심의 대상 사업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의 중요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 좋음

C : 소규모 사업의 경우 심의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도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함. 심의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심의를 없애기 보다는 일정금액(예를 들어 소규모 단기사업) 이하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 1, 2명이 포함된 디자인관리 자문을 일정 횟수 이상 받고, 자문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심의를 면제하거나 심의가 아닌 자문 정도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음. 이보다는 시·군의 심의와 도 심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7. 기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A : 담당자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디자인 전문직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부서 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1년에 1, 2번 정도라도 사업 담당자 대상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사후관리(유지관리, 안전성 등)에 대한 대책을 꼭 점검(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예산 확보 여부 등을 꼭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년에 1, 2번 정도 현장점검이 필요함(체크리스트 제시). 가이드를 제시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음. 자문단이 사업완료 후 1, 2년 뒤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B : 시·군 사업에 있어서의 통합 관리, 사업계획이나 진행에 있어서 도에서 협력업체의 전공분류를 할 필요가 있음(사업과 전공 분류체계의 필요성)
- C :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처음 기획대로 사업이 실행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기존 사업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고, 도나 시·군 담당자들과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을 주게 됨. 전문가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연구성과

2021년	•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경관협정 시범사업 추진 개선방안 • 충청남도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 • 충청남도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개선방안
2020년	•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충청남도 공공건축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2019년	• 고령화사회의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2018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 충청남도 관광지 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년	•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2016년	•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2015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경관·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연구진

연구책임

박혜은 책임연구원

내부연구진

오병찬 책임연구원

강경연 책임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채완석 부대표((주)투엔티플러스)

외부 자문위원(디자인관리 자문단)

이상민 선임연구위원(건축공간연구원)

이선주 건축사(에이지건축사사무소)

이종세 교수(건양대학교)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노윤철 과장(건축도시과)

박 신 팀장(경관디자인팀)

전용현 주무관(경관디자인팀)

이정아 주무관(경관디자인팀)

박찬우 주무관(경관디자인팀)

2021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발행 2021년 12월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re.kr

연구기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처 삼성애드피아

· 본 보고서의 판권소유는 충청남도과 충남연구원에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를 불가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